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 9. 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목 차

I. 2021년 예산안 모습	1
1. 편성 방향	1
2. 재정 총량	2
3.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4
II. 혁신적 재정운용	6
1.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6
2. 예산 편성방식 혁신	7
III. 투자의 중점	9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11
2. 4대 중점 투자분야	17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17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28
(3)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37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48
〈별첨〉 분야별 자원배분	60

I. '21년 예산안 모습

1

편성 방향

□ 그간 재정운영 평가

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실질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비): ('18)2.9 ('19)2.0 ('20.1/4)1.4 (2/4)△2.9

정부부문 성장기여도(%p): +0.8 +1.6 +2.4 +1.3

*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IMF WEO, '20.4월)

② 과감한 재정투자로 국정과제 조기달성 등 체감성과 확산

* 총지출 증가율 : ('08~'12) 6.6% ('13~'16) 4.4% → ('19) 9.5% ('20) 9.1%

*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조기달성('22→'21년), 기초연금 30만원 단계적 조기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22년), 공적임대주택 5년간 85→90.9만호

③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빠르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에 대처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Fitch, 7.31일) 재정악화 등으로 美·日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
(美(AAA)·日(A), 안정적→부정적)

□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① 확고한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 필요 ⇒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

②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③ 우리 정부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 ⇒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 추진

□ '21년 총수입은 483.0조원 [전년대비 +1.2조원, +0.3%]

-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Delta 9.2$ 조원($\Delta 3.1\%$) 감소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4조원(5.5%) 증가

□ '21년 총지출은 555.8조원 [전년대비 +43.5조원, +8.5%] [3차추경 대비 +8.9조원, +1.6%]

- 경제회복·한국판 뉴딜·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 총지출 증가율(%) : ('18) 7.1 $\rightarrow$ ('19) 9.5 $\rightarrow$ ('20) 9.1 $\rightarrow$ ('21) 8.5
총지출-총수입 격차(%p): ('18) 0.8 $\rightarrow$ ('19) $\Delta 3.0$ $\rightarrow$ ('20) $\Delta 7.9$ $\rightarrow$ ('21) $\Delta 8.2$

< 2021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C)	증감			
	본예산(A)	3차 추경(B)		(C-A)	%	(C-B)	%
◇ 총수입	481.8	470.7	483.0	1.2	0.3	12.3	2.6
▪ 예산	319.9	308.8	311.4	$\Delta 8.5$	$\Delta 2.7$	2.6	0.8
(국세수입)	(292.0)	(279.7)	(282.8)	$\Delta 9.2$	$\Delta 3.1$	3.1	1.1
▪ 기금	161.9	161.9	171.6	9.7	6.0	9.7	6.0
◇ 총지출	512.3	546.9	555.8	43.5	8.5	8.9	1.6
▪ 예산	351.1	374.1	370.9	19.8	5.6	$\Delta 3.2$	$\Delta 0.8$
▪ 기금	161.2	172.8	184.9	23.7	14.7	12.1	7.0

□ '21년 재정수지 GDP대비 △5.4%, 국가채무 46.7%

-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9%p 악화(△3.5 → △5.4%)
(3차 추경 대비 0.4%p 개선(△5.8 → △5.4%))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6.9%p 증가(39.8 → 46.7%)
(3차 추경 대비 3.2%p 증가(43.5 →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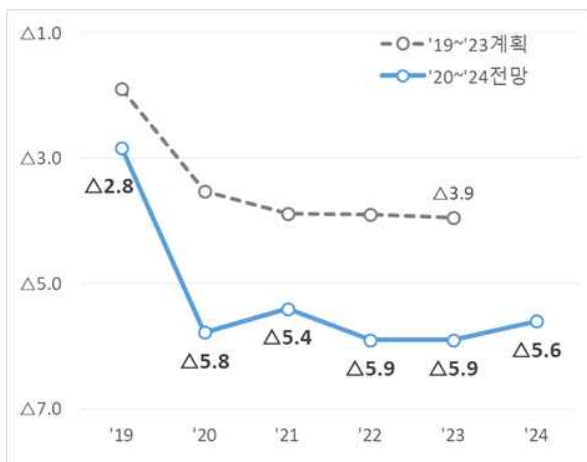
(조원, %)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C)	증감	
	본예산(A)	3차 추경(B)		(C-A)	(C-B)
◇ 재정수지 (GDP대비, %)	△71.5 (△3.5)	△111.5 (△5.8)	△109.7 (△5.4)	△38.2 (△1.9%p)	1.8 (0.4%p)
◇ 국가채무 (GDP대비, %)	805.2 (39.8)	839.4 (43.5)	945.0 (46.7)	139.8 (6.9%p)	105.6 (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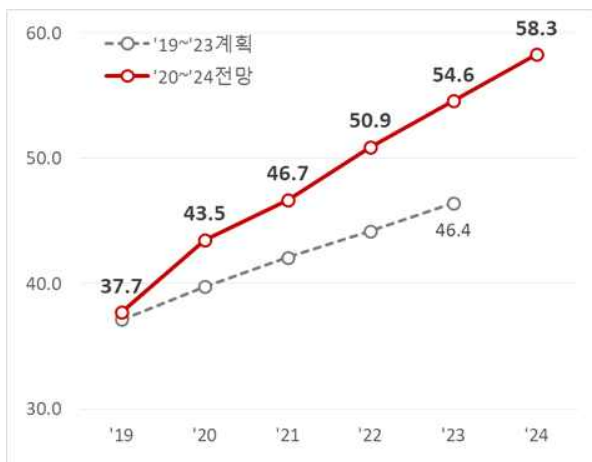
□ 중기 재정수지는 △5% 중반 수준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

- '22년 이후부터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총지출 증가율(%) : ('20예산) 9.1 ('21안) 8.5 ('22) 6.0 ('23) 4.5 ('24) 4.0
- 관리재정수지는 '24년에 GDP 대비 △5% 중반 수준,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

< 관리수지 전망(GDP대비%) >



<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 [산업·환경·R&D] 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 ⇨ +12.3~22.9% 증가

- (산업)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12대 분야 중 최고 증가율(23.7→29.1조원)
 - * 증가율(%): ('17) △1.5 → ('18) 1.5 → ('19) 15.1 → ('20) 26.4 → ('21) **22.9**
- (환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공기·물·녹색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9.0→10.5조원)
 - * 증가율(%): ('17) 0.8 → ('18) △0.3 → ('19) 7.2 → ('20) 21.8 → ('21) **16.7**
- (R&D)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24.2→27.2조원)
 - * 증가율(%): ('17) 1.9 → ('18) 1.1 → ('19) 4.4 → ('20) 18.0 → ('21) **12.3**

□ [복지·일자리]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10.7% 증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조원 수준 반영(180.5→199.9조원)
 - * 증가율(%): ('17) 4.9 → ('18) 11.7 → ('19) 11.3 → ('20) 12.1 → ('21) **10.7**

□ [SOC] 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 확대 ⇨ +11.9% 증가

- SOC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등 뉴딜투자소요, 노후 SOC 안전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23.2→26.0조원)
 - * 증가율(%): ('17) △6.6 → ('18) △14.2 → ('19) 4.0 → ('20) 17.6 → ('21) **11.9**

□ [국방] 스마트강군 구축, 軍 사기진작 투자 확대 ⇨ +5.5% 증가

-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50.2→52.9조원)
 - * 증가율(%): ('17) 4.0 → ('18) 7.0 → ('19) 8.2 → ('20) 7.4 → ('21) **5.5**

<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조원)

구 분	'20년(A)	'21년 정부안(B)	증감 (B-A)	
			(B-A)	%
◆ 총지출	512.3	555.8	43.5	8.5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 일자리	25.5	30.6	5.1	20.0
2. 교 육 (교부금 제외)	72.6 (17.2)	71.0 (17.7)	△1.6 (0.5)	△2.2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3	△2.1	△3.7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 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 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79.0 (26.8)	86.5 (34.8)	7.5 (8.0)	9.5 (29.7)
※ 지방교부세	52.2	51.8	△0.4	△0.8

II. 혁신적 재정운용

1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재량지출의 10% 수준)

□ [사업비] ①우선순위에 따른 감·증액 연계 + ②관행적 보조 감축

① (감·증액 연계) 투자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 ⇨ 低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하여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

* 全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 사업성과수요에 따라 '중점-현행유지-감축'으로 구분

< 분야별·부문간 감-증액 연계 예시 >

도로	(-)신규 토목·건설 공사(△0.3조원) ⇨ (+)정밀도로지도(160억원) 등 디지털 트윈, 지능형교통체계(0.6조원) 등 SOC 디지털화
환경	(-)하수도 등 수질개선(△553억원) ⇨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75억원) 등 그린에너지, 수소차 보급(0.4조원)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외교	(-)방한초청 등 대면외교(△157억원) ⇨ (+)K-방역 등 모범 정책사례를 디지털콘텐츠로 제작 배포(67억원), 초청연수를 비대면으로 전환(76억원)

② (관행적 보조)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보조사업 중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사업유지가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 ⇨ 폐지·축소

- (폐지) 민간시장 활성화로 국고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①플러그인차 보급 (△15억원), ②외식업 SNS 홍보사업(△4억원) 등 폐지
- (감축) 그간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진 ①공영주차장 건립사업(△666억원), ②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20억원) 감액

□ [경상경비]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교통분담

○ (경비절감)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전체 보조·출연기관(166개) 운영경비를 **5% 이상 감액**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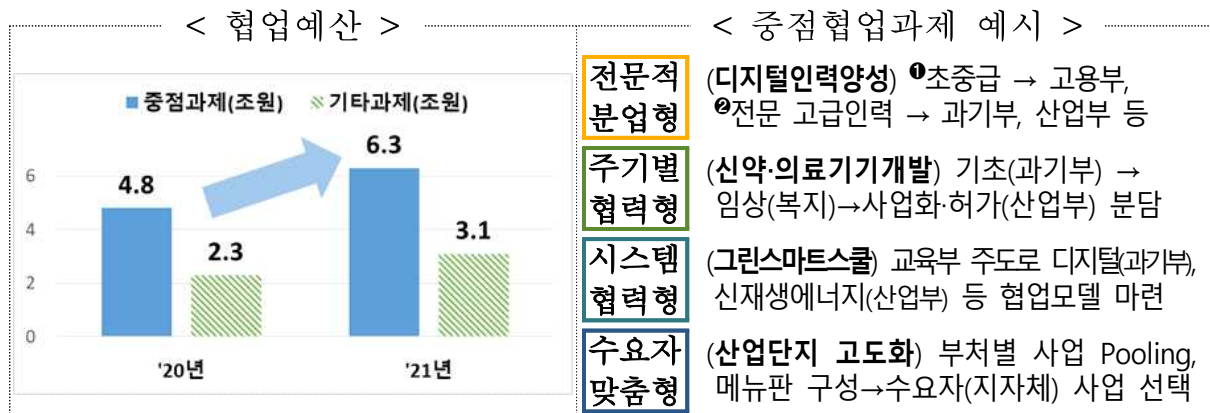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20년 (a)	'21년		
		예산안(b)	구조조정(c)	c/a(%)
계	13,899	13,038	△864	△6.2
- 중앙부처 4대 경상경비	7,952	7,509	△443	△5.6
-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	5,947	5,529	△421	△7.1

○ (공무원 처우개선) 공공부문 교통분담 차원에서 예년수준('20년 2.8%)보다 낮은 **0.9% 인상**(고위공무원단은 동결)

□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업예산 편성 ⇨ 재정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부처간 연계·협력이 긴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12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
 - 관계부처간 TF 구성 공동기획·투자계획 사전조정 등 예산 공동요구 ⇨ 관련예산 조정·입체화하여 묶음예산 편성
 - ①유사중복 제거 및 기능조정을 통한 지출효율 제고, ②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③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과 극대화
- (편성결과) 디지털 인력양성, 신약·의료기기 개발, 그린스마트스쿨 등 **12개 중점과제 예산 30% 이상 증액**(4.8 → 6.3조원)
 - * AI융합(AI-X) 프로젝트,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브랜드K 확산 추진 등 15개 기타과제(2.3→3.1조원) 포함시, **협업예산 총 규모는 9조원 이상**



□ 국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확대 ⇨ 수요자의 요구 반영

- (주요내용) 국민의 적극적인 제안과 숙의·토론을 거쳐 가공된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
 - ①국민의 사업제안을 사업화·반영하는 「제안형」, ②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토론형」으로 구분·편성
- (편성결과) 반영사업수(38→63개) 및 예산반영금액(0.11→0.12조원)을 최대한 확대
 - * 산림재해 드론진화대(10개) 완비, 국가유공자 대상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인프라 구축 등

[협업예산 12대 중점과제]

1 전문적 분업형: 전문성·비교우위에 바탕한 부처간 역할 조정

- | | |
|---------------------------------------|---|
| ① 디지털 인력양성
(0.38 → 0.5조원) |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①초·중급 교육·훈련은 고용부, ②전문 고급인력은 과기부, 산업부 등으로 분업 |
| ② 디지털 정부혁신
(0.24 → 0.44조원) | ①범부처 원스톱 서비스 제공사업은 행안부 중심 추진
②복지멤버십(복지부), 조달(조달청) 등 전문적 수행사업은 각부처 |
| ③ 데이터 수집·활용
(0.06 → 0.1조원) | ①개방가능데이터→과기부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
②비공개·소규모→행안부 공통 플랫폼(혜안),
③비개방·대규모·전문적→각 부처별 플랫폼 |
| ④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0.43 → 0.6조원) | ①생산·유통·산업육성은 산업부, ②인프라는 국토·환경부 등 전문성에 맞춰 중복제거 및 역할분담 |

2 사업주기별 협력형: 부처간 쏠주기 협업체계 마련

- | | |
|---|--|
| ⑤ 신약·의료기기 개발
(0.21 → 0.41조원) | 공동 신약기기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기초(과기부)→임상(복지부)→사업화·허가(산업부)」 주기에 맞춰 R&D 사업분담 |
| ⑥ 미래차 개발·보급
(1.47 → 2.0조원) | 「자율친환경차 기술개발(산업부·과기부)→도로환경 등 인프라(국토부)→충전소 설치·미래차 보급(환경부)」 쏠주기 지원 |
| ⑦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0.34 → 0.35조원) | 시스템반도체 정책협의회(산업·과기·중기부)를 통해 「기술개발→인프라→인력양성」 등 주기에 맞춰 역할분담 |
| ⑧ 소재부품장비산업 협업
(0.01 → 0.06조원) | ①기초→원천→상용화 순차적 기술개발 과제→이어달리기
②기초·원천과 응용·개발 동시추진 가능 과제→함께달리기 |

3 시스템 협력형: 전체적 사업 틀 마련 + 관련사업 연계 지원

- | | |
|---------------------------------------|--|
| ⑨ 그린스마트스쿨
(0.1조원(신규)) | 디지털(과기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친환경(환경부) 등 협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모델 마련 및 보급 |
| ⑩ 디지털성범죄 대응
(0.01 → 0.02조원) | 「인식개선(교육·여가)→유포차단(과기·방통)→단속·수사(경찰)→피해자 지원(여가·방통)」 신속대처시스템 모자이크식 연결 |
| ⑪ 아동학대 방지
(0.03 → 0.05조원) | 「예방조기발견(복지)→초기대응(기재·복지·경찰)→보호지원(복지·법무)→재발방지(복지·경찰)」 단계별 시스템 마련·투자 확대 |

4 수요자 맞춤형: 수요자 선호를 바탕으로 사업 선택, 패키지 지원

- | | |
|--------------------------------------|---|
| ⑫ 산업단지 고도화
(1.58 → 1.66조원) | 부처·사업별 메뉴판을 구성, 수요자(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산단별 혁신계획 수립하여 예산 편성 |
|--------------------------------------|---|

Ⅲ. 투자의 중점

목표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 ◇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 ◇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

전략과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 [그린 뉴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4대 투자중점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 4+4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비활력 제고
- 민간투자(정책금융, 벤처, 유턴·외투 등) 및 공공투자(SOC 고속디지털화안전투자) 확충
-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 제고
- 지역발전투자,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혁신성장 생태계 (R&D, 인재, 금융, 조달) 조성
-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③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사기진작 지원
-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재정혁신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 협업예산 강화 등 혁신적 재정운용 틀 확립

['21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 (160조원 수준)]

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투자** **21.3조원**

(지방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

②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8.6조원**

* ❶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 ❷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4.3조원) +
❸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3.1조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1.8조원**

* ❶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3조원) + ❷4+4바우처·쿠폰(0.5조원)

④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16.6조원**

* ❶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혁신도시·생활SOC 등 3대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
❷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0.4조원) + ❸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
❹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 중복 △3.0조원

⑤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1.0조원**

* ❶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❷스마트대한민국펀드 + ❸미래환경산업펀드

⑥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33.9조원**

* ❶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 ❷융자금 36.7조원 공급(재정소요 30.0조원) +
❸보증자금 27.6조원 공급(재정소요 1.6조원)

⑦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20.7조원**

* ❶일자리(3.9조원) + ❷주거·금융·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 ❸교육·복지(4.5조원)

⑧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46.9조원**

* ❶생계(5.5조원) + ❷의료(18.7조원) + ❸주거(21.0조원) + ❹교육(1.7조원)

⑨ **K-방역 + 수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7.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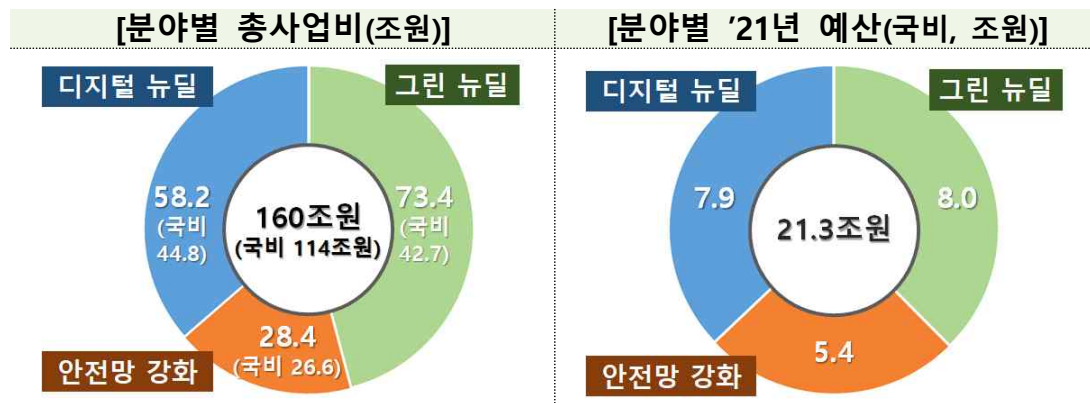
* ❶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1.8조원) + ❷풍수해·산사태·하천·댐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 ❸교통안전·산재예방·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기(2.7조원)

⑩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3.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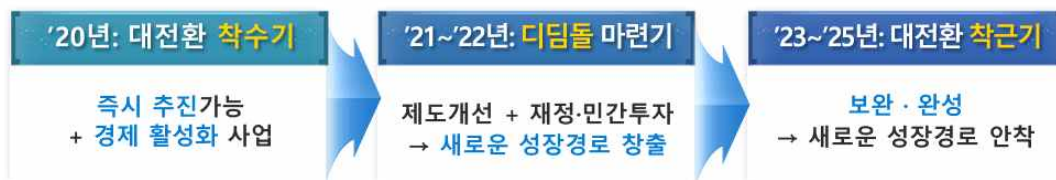
* ❶깨끗한 공기(1.3조원) + ❷맑은 물(1.1조원) + ❸녹색생활공간 조성(0.6조원)

◇ 정책과제

-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25년까지 160조원 (국비 114.1조원), 일자리 190.1만개, '20.7월 발표)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 '20년 3차 추경(4.8조원)에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예산을 반영
⇒ '21~'22년동안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 본격 투자



◇ 재정지원 방향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 중심 집중투자



□ 한국판 뉴딜 '21년 예산 21.3조원 반영, 일자리 36만개 창출

- ('21년 예산)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1.3조원 투자
* 국비 투자에 매칭되는 지방비 및 민간 부담분 포함시 약 32.5조원
- (일자리) 36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구 분 (국비기준, 조원)		투자계획		'21년 예산안
		'20추~'25년	'20추~'22년	
총 계		114.1	49.0	21.3
디지털 뉴딜	합 계	44.8	18.6	7.9
	1. D.N.A. 생태계 강화	31.9	12.5	5.4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0.8	0.6	0.1
	3. 비대면 산업 육성	2.1	1.1	0.5
	4. SOC 디지털화	10.0	4.4	1.9
그린 뉴딜	합 계	42.7	19.6	8.0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2.1	6.1	2.4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10.3	4.3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6.3	3.2	1.3

안전망 강화			
합 계		26.6	10.8
1. 고용사회 안전망		22.6	9.3
2. 사람투자		4.0	1.5

□ 10대 대표과제 + 안전망 강화에 80%(17.0조원) 집중

- (10대 대표과제) 디지털·그린뉴딜 대표과제에 11.6조원 투자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스마트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안전망 강화) 8개 과제에 5.4조원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사람투자	
①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1조원	①디지털·그린인재 12만명 양성	0.2조원
②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4조원	②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3조원
③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1.0조원	③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0.2조원
④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0.6조원		
⑤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6조원		

□ 디지털뉴딜 7.9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 강화 5.4조원

① (디지털) '25년까지 44.8조원 투자계획 → '21년에 7.9조원

- 데이터 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4조원
-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0.1조원
- 의료·돌봄·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원
-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에 1.9조원

② (그린) '25년까지 42.7조원 투자계획 → '21년에 8.0조원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4조원
-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3조원
-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3조원

③ (안전망) '25년까지 26.6조원 투자계획 → '21년에 5.4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7조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제로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 0.7조원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투자계획]

- ◇ 10대 대표과제에 '20~'25년 68.7조원 투자계획
⇒ '21년 예산에 11.6조원 투자

① 데이터 뎀 ('20~'25) 15.5조원 ⇒ ('21) 2.8조원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0.3조원) 및 의료기기안전 등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0.2조원)

⇒ AI·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현안해결

-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 초산업(1·2·3차) AI활용률 제고

- VR·AR·IoT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전국 113개소 구축(366억원)

⇒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확충, 박물관·미술관 이용 활성화

② 지능형(AI) 정부 ('20~'25) 9.7조원 ⇒ ('21) 0.8조원

- 전자소송,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0.4조원)

⇒ 민원처리 등 공공서비스(등기, 보조금 등) 지능형·맞춤형 제공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133억원)

⇒ 전국민 생활서비스(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신뢰성·보안성 강화

-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205억원),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600억원)

⇒ 언제·어디서나·신속한 스마트 업무환경, 실시간 대민서비스 구현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25) 0.1조원 ⇒ ('21) 0.06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누적 1,000개소, 500억원),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8→20개 질환, 50억원)

⇒ 감염병 안전진료 환경 구축 및 AI 정밀검진 기반 마련

4 그린 스마트 스쿨

['20~'25] 3.4조원 ⇨ ['21] 0.1조원

-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BTL 물량 포함 71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25년까지 총 2,835동)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 미래형(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전국 초·중·고 확산

5 디지털 트윈

['20~'25] 1.5조원 ⇨ ['21] 0.3조원

- '22년까지 국토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160억원)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 조기 완비

-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406억원),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원)

⇨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상황(지하공동구·화재 등) 감지 정확도 향상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20~'25] 10.0조원 ⇨ ['21] 2.4조원

- 국토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0.6조원), 철도 62%에 IoT 설치(0.3조원),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0.2조원)

⇨ 안전사고 사전 예측·예방, 사고발생시 즉시대응 가능

-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68억원)

⇨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 지원 및 감염병 대응력 강화

7 스마트 그린 산단

['20~'25] 3.2조원 ⇨ ['21] 0.7조원

-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0억원)

⇨ 에너지 사용 실시간 감시·예측·제어 등 산단 내 에너지 효율화

-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0.5조원),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441억원)

⇨ 미세먼지 최대배출원(38%)인 산업분야 미세먼지 방출량 저감

8 그린 리모델링

['20~'25] 3.0조원 ⇨ ['21] 0.7조원

-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0.6조원)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및 주거환경 개선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40C-km)

⇨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 안전 증진, 도시 경관 개선

9 그린에너지

['20~'25] 9.2조원 ⇨ ['21] 1.3조원

-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관련 기술·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등(145억원)

⇨ 최적입지 발굴을 통한 사업성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기 구축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 확대(1.0조원)

⇨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 및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 수소생산-활용 쉼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770억원)

⇨ 수소산업의 조기 정착 기반, 수소경제 체험기회 확산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25] 13.1조원 ⇨ ['21] 2.4조원

-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1.6조원), 노후 차량 3.2만대 친환경 전환 및 33.2만대 조기폐차(0.6조원)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

- 관공선·합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0.1조원)

⇨ 황 배출량 감소 등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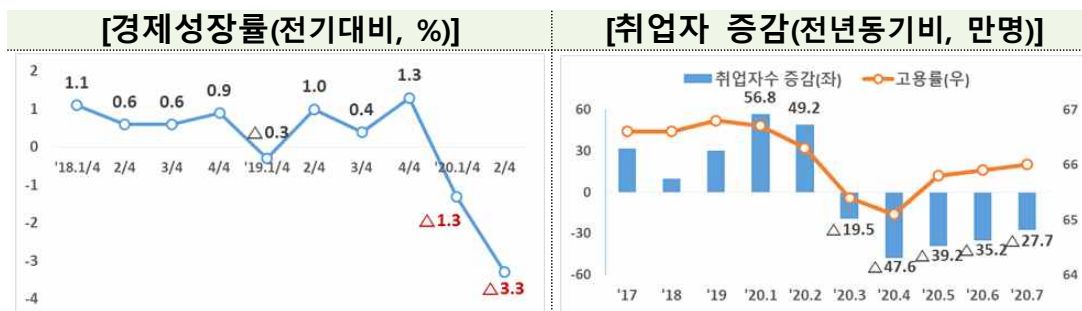
◇ 정책과제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부터 조기회복과 경제반등 모멘텀 공고화 필요
- 단기적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선제적 일자리 창출이 절실

* 고용률: ('20.1) 66.7 → (4) 65.1 → (7) 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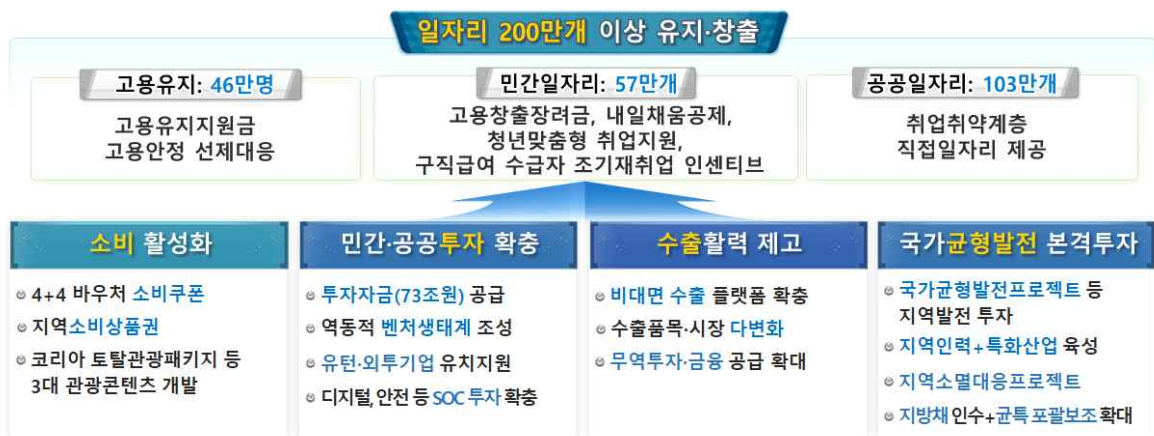
-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비수도권 인구: ('00)53.8→('20)49.8%(△4.0%p), GRDP: ('00)52.0→('18)48.1%(△3.9%p)



◇ 재정지원 방향

- 일자리 200만개 이상 유지·창출, 내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젝트 집중 투자



◇ '2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년	'21년
일자리 유지·창출	국민취업지원제도	20만명 (제도 미시행)	40만명
	고용유지지원금	2만명	45만명
	공공일자리	95만개	103만개
소비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	2.5조원	3조원
투자확충	정책자금 공급규모	총 54.5조원	총 72.9조원
	유통·외투기업 보조금	11개사	27개사
	스마트시티 챌린지	17개 도시	27개 도시
	SOC 디지털화	(국도 ITS) 4,361km (철도 IoT) 2,578개	6,861km 10,439개
수출활력 제고	무역보험·보증 공급	2.9조원	5.8조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추경) 1,780개社	3,773개社
	수출바우처 수혜기업	3,573개社	3,845개社
국가 균형발전	혁신도시 지원	-	10개 도시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3개 플랫폼	4개 플랫폼
	청년자립마을	3개소	15개소

- **고용유지**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1.2조원),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확대(5→8개 지역, 0.8만명)
 - * (인천) 뿌리산업 고도화, (경남창원) 기계·조선·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등
- **민간일자리**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지원해 ①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②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 유도
 - * ①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신규),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신규)
 - ②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120%이하) 10만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3만명
 - (중장년) ①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확대(9만명), ②훈련생계비 신설(2,500명), ③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500개社)
 -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포함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 지원(1.2만명)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12→15개소, 190억원)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3.1→4.6만개, 691억원)
 - 스마트상점(0.1→2.3만개, +204억원) 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0.3조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313→734억원) 등
- **공공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 제공
 - *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0.8만개 확대(3.7→4.5만명)
 - *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고용유지지원금	351	11,914	· 지원대상 확대(2 → 45만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9	12,018	·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	4,676	· 중소·중견기업이 IT직무에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등 월19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771	8,286	·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청년 120%)에 구직수당(50만원×6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7	190	· 12개소 → 15개소(+3개소)
- 직접일자리	28,587	31,164	· 노인돌봄 3.3만개, 장애인일자리 2.5만개, 자활근로 5.8만개 등

② 소비활력 제고

[0.7→2.1조원]

- **소비촉진**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물·문화·관광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지원(2,346만명, 0.5조원)

(단위 : 만명, 억원)

구분	지원내용	인원	예산
계		2,346	4,906
4대바우처	농산물 구매지원	임산부·저소득층 등에 농산물·우유급식 등 제공	82 701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	177 1,261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	7.2 332
	근로자휴가지원	국내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매칭 지원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10 110
4대쿠폰	농수산물 쿠폰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최대 1만원) 지원	1,200 1,220
	외식 쿠폰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1만원 모바일 쿠폰 제공	660 670
	숙박 쿠폰	온라인 숙박 예약시 2~3만원 할인쿠폰 제공	150 432
	체육 쿠폰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60 180

- **지역상권회복**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 (0.3→1.3조원),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新마케팅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3→15조원), 온누리상품권(2.5→3조원) 5~10% 할인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38→88곳), 테마형 상권르네상스(13→19곳) 조성

- **관광활성화** 코로나19 위기를 국내관광 활성화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관광콘텐츠 개발·지원

-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2개 권역 시범 실시(1,804→2,354억원)

* 해외관광객에게 공항입국·숙소·관광지 등 동선에 따라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빈틈없이 패키지로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인프라 지원

- (디지털 관광콘텐츠) 문화유산·박물관 등 지역관광자원(113개소)을 AR·VR·Io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화(267→366억원)

- (생태관광) 한려해상·다도해 등 6대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 인프라(탐방로, 자연체험장, 체류형 인프라 등) 확충(신규 300억원)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案	비고
- 4+4 바우처·쿠폰	1,893	4,906	· 숙박쿠폰(150만명), 체육쿠폰(60만명) 등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034	13,271	·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18조원)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1,804	2,354	· 지방공항 중심 2개 권역 공모 선정

【 민간투자 지원 】

[28.3→39.9조원]

- **정책자금**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전년(54.5조원)보다 18.4조원 확대하여 72.9조원 공급(재정소요 26.4→33.9조원)
- (투자) 2.3조원 출자 ⇨ 8.6조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 조성
 - (뉴딜펀드) 「한국형 뉴딜」 뒷받침을 위한 디지털·녹색산업분야 투자펀드 조성
 -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인 3.7조원 규모 조성 ⇨ 재정출자 1.7조원 (회수 0.4조원 포함)
- (융자) 30.0조원 재정 투입 ⇨ 36.7조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 촉진, 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산업·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출자, 중진·소진기금 융자 지원
- (보증) 1.6조원 재정 출연 ⇨ 27.6조원 규모 보증 공급
 - ❶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0.6조원), ❷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6조원), ❸수출기업 유동성 공급(0.4조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 확대

(단위: 조원)

	사업	지원내용	자금공급	재정지원
	계		72.9	33.9
투자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 등	• 창업초기 유망 벤처 집중투자 • 소재부품장비기업 투자 지원 등	8.6	2.3
	소계		36.7	30.0
융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 산업구조고도화, 환경안전투자 지원 등 •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지원 등	7.6	1.0
	중소기업진흥기금	• 中企 시설투자, 수출개척, 재도약 등 지원	5.7	5.7
	소상공인진흥기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 스마트화 지원	3.6	3.6
	소계		27.6	1.6
보증	신용기술보증기금	•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분야 보증 공급 등	2.5	1.0
	무역보험기금	• 수출기업 해외수주 지원 등	5.4	0.4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19.5	0.2

- **벤처·창업**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집중 지원(5.7→5.8조원)
 - (모태펀드) 1.7조원 출자(예산 1.3, 회수재원 0.4조원)하여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버팀목펀드(0.3조원) 등 3.7조원 규모 펀드 조성
 - (사업화)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 신설(200팀, 300억원), 민간창업전문가가 발굴한 스타트업 육성(TIPS) 확대(300→400개사)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R&D·사업화 연계의 기술 창업 지원
 - (인프라) 벤처기업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1개소, 145억원) 및 스타트업파크(2개소, 242억원) 조성
- **해외투자유치**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R&D 등 맞춤형 지원(0.1→0.2조원)
 - (투자유치) 유턴·외투기업 보조금(550→1,100억원),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우수 해외기업 대상 IR 확대(4→10회), 유턴기업 원스톱 지원 데스크 확대(6→8개소) 등 전방위적 투자유치활동 지원 확대
 - (인재유치)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스탠포드대학 연구센터·해외대학 공동기숙사 신설 지원(43억원)
 - (R&D) KAIST·GIST - MIT간 AI 분야 협력사업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확대(411→50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벤처·창업지원			
- 모태펀드 출자	11,390	12,793	· 버팀목펀드 1,800억원 · 혁신창업펀드 1,000억원 등
- 창업사업화지원	450	1,050	· 혁신창업패키지(300→700개사)
-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023	1,260	· 스타트업파크 2개,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
○ 해외투자유치			
- 투자유치기반조성	945	1,505	· 유턴·외투기업 보조금(550→1,100억원) 등
- 고용창출장려금	11	22	· 유턴기업 신규고용시 인건비 보조(200→400명)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44	43	· 스탠포드 연구센터, 해외대학 공동기숙사 설립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411	505	· 한·미·독·프·영 등 국가간 공동연구 확대

- **교통**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 집중 투자(8.4→9.2조원)
 * ('21년 완공)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
- **물류**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95억원) 확충,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첨단물류설비 용자 신설(0.5조원)
- **도시·건축**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27개 도시),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 투자(0.1→1.0조원)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데이터허브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
 - 세종은 교통·헬스 등, 부산은 에너지·환경 등 혁신 서비스 실증(712→1,022억원)
 - (스마트시티 챌린지) 27개 도시(대도시 11, 중소도시 16개)에 수요 응답 버스, 자율항행 드론 등 스마트기술 확산(269→1,034억원)
 - (제로에너지 건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8.4만개), 신규 체육시설·어린이집에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133개소)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2.4조원)
 - (도로·철도)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24년 100%), 철도 62% 구간에 IoT 계측기 설치('22년 100%)
 - (공항·항만)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수자원)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22년 100%), 지방상수도 72% 스마트화('22년 100%)
-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재해 高위험지역 510개소에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설치
- **기반시설 안전투자**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 대폭 확대(5.4→6.0조원)
 - (도로)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210개소), 설해 대비 자동염수분사시스템 구축(48개소) 등(1.5→1.7조원)
 - (철도) 노후 선로시설 개량(401개소), 내진성능 보강(5개소), 선로전환기 개량(1,221개소) 등(1.6→1.8조원)
 - (하천·저수지)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0.5→0.6조원) 및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0.7→1.0조원)
 - (성능개선투자) 충당금 적립 유도, 관리주체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성능개선비 지원(시범 2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도로·철도 건설투자 ('20년 준공 소요 제외)	83,653	91,629	· 세종-구리 고속도로(4,562→6,699억원) · 호남고속철도건설(900→2,000억원)
- 스마트시티	1,287	2,207	· 스마트시티확산 +1,075(981→2,056)
- 그린리모델링	199	6,075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신규) +2,276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신규) +3,545억원
- 기반시설 안전투자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54,433 (13,292)	59,736 (23,765)	· 도로 안전 +1,300(15,427→16,727), · 철도 안전 +1,998(16,135→18,124), ·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200→1,800억원)

4 수출활력 제고

[0.9→1.2조원]

- **무역 투자·금융**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8조원 추가공급(재정지원 0.6조원)

(단위: 조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자금공급	재정지원
계		5.8	0.6
무역보험기금	·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3.8조원 · 수출채권 현금화보증 등 1.6조원	5.4	0.4
수출입은행	·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대출	0.2	0.1
해외인프라투자공사	· 해외건설사업 수주지원펀드	0.2	0.05

- **수출 마케팅** 수출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0.5→0.6조원)

- 수출 바우처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 전년대비 50% 확대(1,407→1,525억원)
-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3,800개社) 및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60개社, 30억원) 등 비대면·온라인 채널 활성화

* Amazon(미국), Qoo10(싱가포르), TaoBao(중국) 등

- **수출 다변화**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도록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 외국인환자 ICT 의료 관리, 피부 유전체분석 등 의료·화장품 현지공략(166억원), 스마트팜 플랜트 패키지(47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49억원) 등

** KOTRA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신규 설치(3개소) 등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107→153억원),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49→70억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	4,000	· 인프라 수주 및 중소기업 지원(5.4조원)
- 수출지원기반 활용	1,407	1,525	·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3,845개社)
- 무역투자진흥(KOTRA)	2,695	2,831	· 해외지사화(5,000→5,500개社, 356억원)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776	917	· 플랫폼 입점지원(2,773개社, 133억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632개社, 153억원)
- 글로벌화 지원플랫폼	200	311	· 비대면 수출프로그램 지원(60개社, 30억원)

5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13.3→16.6조원]

- **지역발전투자** ❶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❷혁신도시, ❸생활 SOC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 투자 추진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 19개 SOC 설계·착공 + 4개 R&D 실증·사업화 지원(0.4→0.7조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예산(억원)
계			7,259
SOC	기본설계 마무리	■ 세종-청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13건	1,649
	착공소요 반영	■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건	2,419
R&D		■ 특화산업 R&D 실증·사업화 4건	3,19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신규 450억원)

※ (예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신도시에 5G+ 실감학습터 구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비대면 ICT교육 콘텐츠 제공, 5G+ 실감콘텐츠 개발
 - 지자체·교육청 : 3D펜 등 교구대여, AI영재학급 지정운영, 5G+ 공간 대여

- (생활SOC) 당초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하고(10.5→11.1조원),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 지원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

- (지역인재)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집중 지원(0.1→0.17조원)
- (지역특화산업) ❶규제자유특구, ❷강소연구개발특구, ❸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0.15→0.19조원)

- (규제자유특구) 23개 특구에 R&D과제·실증장비·사업화 패키지 지원(1,445억원)
- (강소연구개발특구) 12개 특구에 기술 사업화·창업을 위한 R&D투자(300억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5대 클러스터(청정대기, 수열, 생물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초기 착수예산 반영(206억원)

- (문화·관광인프라)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17개),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259→567억원) 추진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 적극 지원
 - (인력유입) 지역 디지털 일자리(7천명),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육성(4,800→5,000명)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
 - (정착) 청년자립마을* 12개소 추가 구축,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 지원(80개 시군)
 - * 낙후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터전을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창출(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과 정착을 지원
 - (지역활성화)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소), 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도시재생(0.7→0.8조원) 등 추진
- **지방재정 보강** |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토록 지방채 인수 규모(0.7조→2.6조원)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2.4→2.5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지역발전투자	109,025	118,362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4,348	7,259	·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완료(150→406억원) · 서남해안관광도로 착공(400→715억원) · 지역특화산업 육성(999→1,261억원) 등
- 혁신도시	-	450	· 공공기관 연계 10대 투자사업(신규)
- 생활 SOC	104,677	110,653	· 안전한 삶터 구축(4.2조→4.4조)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0.8조→1.1조)
○ 지역경제 활력	2,810	4,228	
- 지역인재	1,080	1,710	· 지역혁신플랫폼 3→4개 확대
- 지역특화산업	1,471	1,951	· 규제자유특구(14→23개), 강소특구(6→12개) 녹색융합 클러스터(신규 2개)
- 문화관광 인프라	259	567	· 관광거점도시(5개) 지원 확대(159→383억원) · 문화도시 지정 확대(7개, 100억원→12개, 184억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18,320	23,223	
- 인력유입·정착	6,360	8,721	· 지역 디지털 청년일자리(+784억원, 7천명) · 청년자립마을 확대(3개, 9억원→15개, 77억원)
- 지역 활성화	11,632	14,115	· 어촌뉴딜(4,305→5,180억원) · 도시재생 뉴딜 확대(6,957→8,363억원)
- 지역 다양화	327	387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313→330억원)
○ 지방재정 보강	31,174	50,503	
- 지방채 인수규모	7,000	26,000	· 지방교부세 감소(△0.4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위한 지방채 발행(0.6조) 등 감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24,174	24,503	· 일반 농산어촌개발(5,239→6,134억원) · 지역사회활성화기반 조성(128→430억원)

* ('20) 2.8조원, ('21) 3.0조원 중복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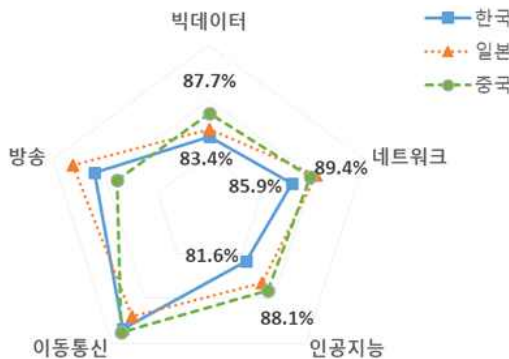
-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R&D 투자확대 기조 지속과 함께 투자효율 제고

* GDP대비 R&D투자(%,'17): (한국('18)) 4.8, (미국) 2.8, (일본) 3.2, (중국) 2.2, (독일) 3.0

** IMD 국가경쟁력('20.6월): 과학인프라 3위(전년동), 기술인프라 13위(전년대비 9계단 상승)

-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유망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필요

[DNA분야 기술경쟁력(미국=100)]



* ICT기술수준조사보고서(과기정통부, '18)

[주요국 재생에너지 비율(%)]



* OECD

◇ 재정지원 방향

- R&D 혁신자원 생태계 확산과 함께, DNA + BIG3 + 그린산업 +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



◇ '2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년	'21년
혁신생태계 조성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양성	-	2만명
	실전형 전문인재 양성	4.7만명	6.3만명
	혁신모험자금 공급	0.3조원	7조원
	혁신조달	144건 (1개 부처)	542건 (5개 부처)
DNA + BIG3	AI 학습용 데이터	20종	150종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	45건	61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	15건
	친환경차 보급 (전기) (승용차 기준) (수소)	7.3만대 1.3만대	10.1만대 1.5만대
	쑈주기 의료기기 개발	276개	320개
그린산업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조사)	2GW	3GW+2개 권역
	수소생산기지(소규모)	8개소	17개소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40만호(추경)	225만호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對日 100개 품목	對세계 338개 품목
	경제자유구역	7개 지역	9개 지역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단가 인상	(Lv.3) 1.5억원	(Lv.3) 2억원 (Lv.4) 4억원

1 R&D·인재·금융·조달 등 혁신생태계 조성 [24.9→29.6조원]

- **R&D 투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R&D투자 대폭 확대 (24.2→27.2조원)
 - (투자 확대) ①한국판 뉴딜, ②소부장, ③BIG3, ④기초원천 R&D, ⑤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 집중

지원기관	주요 지원내용	예산
①한국판 뉴딜	· 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 쏠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1.9조원
②소재·부품·장비	·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 달성 · 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글로벌 공급망 관리 철저	2.2조원
③BIG 3	·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자율차 등 미래차 상용화, 신약 등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2.3조원
④기초원천 R&D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지원,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등 투자 확대	7.3조원
⑤인재 양성	· AI대학원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등 산업별 특화 과정 신설 등	0.3조원

- (효율화) R&D 성과 제고를 위해 多부처 공동의 융합R&D 투자 확대* 및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 정비** 등 추진

* 융합R&D : ('20) 1.2 → ('21안) 1.8조원(+0.6조, 50.5%)

** 48개 정부 출연연의 미션과 주요역할 재정비와 연계해 R&D 사업구조 개편

- **혁신인재** AI·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전형 인재 양성
 - (고등인재)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 * 8개 신기술분야별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선정 +디지털 교육과정 개발·공유 + 가상캠퍼스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외공개
 - (실전인재) 산학연 교육훈련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 양성(0.4→0.5조원)
 - * 이노베이션 스퀘어(159→326억),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57→350억) 등

- **혁신금융**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증·융자 등 **혁신모험자금 7조원** 공급(재정 2.1조원)

(단위: 조원)

	사업	지원내용	자금공급	재정지원
	계		7.0	2.1
투자	혁신투자펀드	· 혁신기업·프로젝트 지원 ·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 중소·벤처 지원	5.0	1.0
보증	소계		1.0	0.1
	엔택트 보증	· 비대면 기술개발·활용 중소 지원	0.6	0.05
	녹색기술 보증	· 신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지원	0.4	0.05
융자	소계		1.0	1.0
	친환경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구축지원	0.4	0.3
	신재생에너지융자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0.7	0.7

- **혁신조달**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및 시장 테스트 기회 확대 지원

- (정부)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비 대폭 확대

* 조달청(99억원) → 조달청·중기부·과기부 등(500억원)

- (민간) 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 민간 초기시장 창출 지원

* 의료기기 사용 경험 피드백·컨설팅 등(53억원), AI기반 폐암진단 SW 보급(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R&D 투자	242,195	272,003	
- 한국판 뉴딜	9,704	19,211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882억원, 신규)
- 소재·부품·장비	17,206	21,515	· 소재부품기술개발(6,027→8,866억원)
- BIG3	17,202	23,379	·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936→1,864억원)
- 기초원천 R&D	69,065	73,297	· 개인기초연구(12,408→14,770억원)
- 인재양성	2,565	2,878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60억원, 신규)
○ 혁신 인재	3,934	5,725	
- 고등인재 양성	-	1,048	·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1,048억원, 신규)
- 실전인재 양성	3,934	4,677	· 4대 권역별 이노베이션스퀘어(159→326억)
○ 혁신 금융	3,020	19,001	· 투자 8,300억원, 보증 980억원, 융자 9,721억원
○ 혁신 조달	134	556	· 공공부문 시범구매 확대 등(99→500억원)

【 D.N.A 】

(1.9→3.1조원)

○ (Data)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등 쏠주기 생태계 강화(0.8→1.5조원)

- 新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2,925억원), 민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1,997억원)
-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 (Network)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확대(0.7→0.9조원)

-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용(400억원),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679억원)
-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205억원)

○ (AI) AI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1·2·3차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융합 지원(0.4→0.7조원)

-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140억원),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673억원)
- 쏠산업 AI활용률 제고를 위한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의료·치안 등 7대 분야 AI+X 융합프로젝트 추진(503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Data	7,987	14,915	
- AI학습용데이터 구축	390	2,925	•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 공공데이터개방·이용	362	1,997	• 공공데이터 4.4만개 개방·이용활성화
○ Network	6,679	9,202	
- 5G융합서비스	-	400	• 안전·보건 등 공공서비스 5건
- 5G기반 스마트업무환경	-	205	• 중앙행정기관 10개소 시범운영
○ AI	4,282	6,662	
- AI바우처 지원	39	560	• 1·2·3차 쏠산업 분야 200개사 지원
- 핵심원천기술 개발	62	140	• 딥러닝 고도화 등 12개 과제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해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 확대(0.3→0.4조원)

- (R&D)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891→1,223억원, 다부처),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60억원, 신규)
- (인력·인프라) 파워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16.5→19.5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36→72억원)

- (미래차)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1.5→2.0조원)

-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882억원, 신규, 다부처)
- (친환경차) 전기차(7.3→10.1만대)·수소차(1.3→1.5만대) 보급 지원 등

- (바이오헬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前임상-임상-생산 소주기 지원(1.3→1.7조원)

- (R&D)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128억원, 신규, 다부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932→1,864억원, 다부처) 등
- (인력·인프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31억원, 신규), 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1만명→1.5만명) 등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시스템반도체	3,402	3,530	
- 기술개발	1,946	2,269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891→1,223)
- 인력양성 등 인프라	1,456	1,262	•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36→72)
○ 미래차	14,697	20,045	
- 기술개발	1,759	2,989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882, 신규)
- 인프라	1,312	1,297	• 수소생산기지구축(250→450)
- 보급	11,496	15,759	• 전기차(0.8→1.1조원), 수소차(0.3→0.4조원)
○ 바이오헬스	12,966	16,853	
- 산업 고도화	8,840	11,570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932→1,864)
- 지원생태계 조성 등	4,126	5,283	• 규제과학 인재양성(31, 신규)

- **태양광·풍력**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 지원(0.8→1.3조원)
 - (자금)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금융(0.7조원)·보급(0.3조원) 지원
 - (입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타당성조사(4개 권역, 75억원)
 - (R&D)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태양광 기업공동연구센터
 - (지원 인프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신규 2개소) 구축 및 계통지원을 위한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132억원)
- **수소산업**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에 시급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0.4→0.6조원)
 - (생산) 수소생산기지(9개소), 생산·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 (유통)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유통감시센터 구축, 수소거래소 구축 계획 수립,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16개)
 - (활용) 수소충전소 구축(56개소), 수소자동차 보급(1.5만대), 수소도시 조성(3개소)
- **에너지효율**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225만호), 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1,200동)
- **녹색기업** 환경현안 해결 혁신기술* 보유 75개 기업 선정, R&D→사업화→판로개척 등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765억원)

*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측정장비,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기술 등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태양광·풍력	8,350	12,873	
- 녹색혁신금융	-	870	· 국민주주 프로젝트(370억원), 녹색보증(500억원)
- 공공 ESS 구축사업	-	132	· 제주지역 계통안정화 ESS 25MWh
- 해상풍력 실증인프라	20	70	· R&D, 시제품, 인력양성 등 지원허브(1→3개소)
○ 수소산업	4,297	5,986	
- 수소생산기지	299	566	· 소규모 생산기지 9개소 추가(8→17개소)
- 수소차 구매보조	2,543	3,655	· 구매보조 1.3→1.5만대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	1,586	· 아파트 225만호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2.1→2.6조원)하고, R&D 등 집중지원*
 - * 소재부품 기술개발(6,027→8,866억원), 나노소재 기술개발(1,197→1,954억원) 등
-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6조원 규모 자금 공급(출자·출연 0.34→0.39조원)
- **산업단지**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업그레이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1.63→1.75조원)
 - (산단)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특화시설 구축
 - * 통합관제센터(+3개), 물류플랫폼 구축(+1개) 등
 - 5개 산단대개조 지역에 산단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지역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공유인프라 우선·집중 지원
 -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148→350억원), 특화형 기술개발·사업화(120억원)
 - (경자구역) 2개 지역 추가 지정(기존 7개+광주·울산) 및 경자 구역 2.0 도약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운영 지원
 - *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신규, 30억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383→684억원)
- **중소기업 스마트화**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2.0 고도화, R&D·금융 등 종합 지원(1.0→1.2조원)
 - (클러스터)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 대상 통합·연계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신설(3개소, 12억원)
 - (고도화) Lv 3 이상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Lv3 1.5→2억원, Lv4 4억원, 신설) 및 사후 A/S 신설
 -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서비스 기술 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융자·보증 1조원 공급(0.5→0.6조원)

- (R&D) 제조현장 AI 표준모델 구축 등 R&D 지원(592→756억원)
- (뿌리산업) 공정·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공동운송체계 도입, 스마트공방(6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 추가 지원
- **유망 서비스업 육성** 문화·관광, 헬스케어를 온라인·비대면화 선도분야로 집중 육성(28→539억원)
 - (문화·관광) AI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온라인 공연·전시·스포츠코칭 서비스 등 제공 확대(15→453억원)
 - (건강관리·의료·돌봄) 5G·IoT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온라인·비대면화 촉진
 - 웨어러블기기 보급 등 비대면 헬스케어(9만명), 스마트병원(3개소), 돌봄로봇 등 온라인·비대면 케어 활성화(13→8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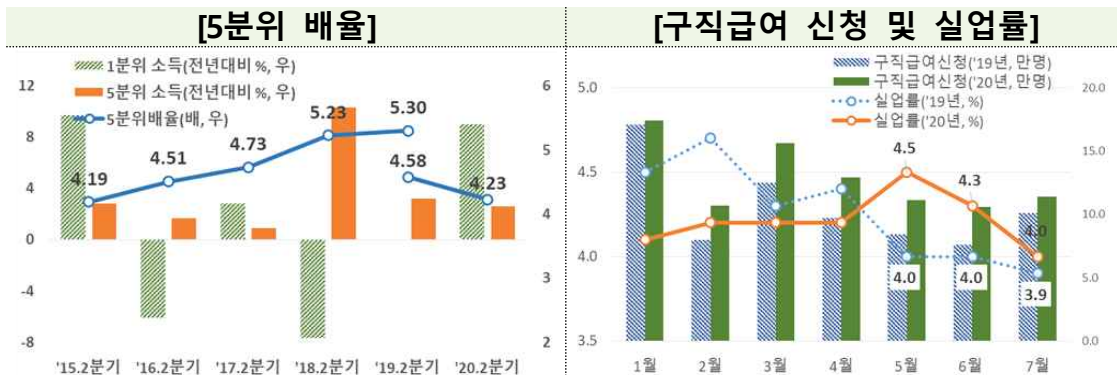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소재·부품·장비	20,725	25,611	
- 기술개발	14,259	18,884	· 핵심전략품목(338개) 중심 기술자립화 지원 등
- 기반구축	3,051	2,813	· 공공연(15개) 장비 구축(154종, 890억원) 등
- 자금지원 등	3,415	3,914	· 혁신모험펀드(2,000→2,500)
○ 산업단지	16,266	17,474	
- 산업단지환경조성	4,310	3,396	· 통합관제센터(+3개), 물류플랫폼 구축(+1개), 인력양성(+5개) 등
- 산단대개조 기업 지원	-	120	· 5개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	30	·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기업 사업화 지원 등
- 경자구역 기반시설 지원	383	684	· 진입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화	10,360	11,568	
- 스마트공장보급확산	4,468	4,536	· 보급목표 확대(5,500→6,000개사) · 디지털클러스형 신설(3개소)
- 스마트제조 자금지원	5,300	6,320	· 보증 0.4조원, 융자 0.6조원
- 스마트공방	39	294	· 소공인 600개사 지원
○ 유망서비스업 육성	28	539	
- 관광선도기업 글로벌육성지원	15	51	· 대상기업 확대(8→30개사)
-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제작지원	-	290	· 온라인 K-pop 공연장 조성
- 비대면 헬스케어	-	27.5	· 건강취약계층 웨어러블 보급(8→9만명)
- 스마트병원 구축	-	30	· 선도모델 3개 신규 선정

[3]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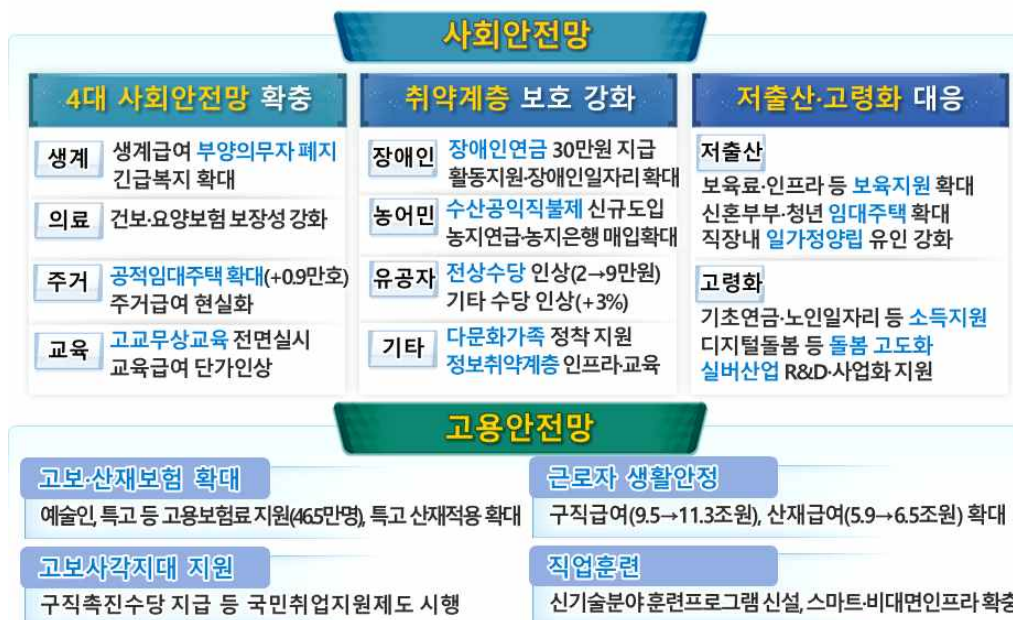
◇ 정책과제

- 코로나19 등에 따른 **분배악화** 요인에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
 -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삶의 질 개선** 지속 필요
 - * 경제적 애로 비중(장애인삶패널조사, %): (食) 16.6, (宙) 41.4, (의료) 26.3, (문화) 55.4
 - * 농업소득(만원): ('15) 1,125.7→('16) 1,006.8→('17) 1,004.7→('18) 1,292.0→('19) 1,026.1
 - **출산율***의 지속 하락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책 강구 필요
 - * 합계출산율(명): ('14) 1.21 → ('15) 1.24 → ('16) 1.17 → ('17) 1.05 → ('18) 0.98 → ('19) 0.92
- 산업구조 급변, 고용패턴 다변화 등에 대응한 **적극적 고용투자 확대** 긴급요



◇ 재정지원 방향

-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2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년	'21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기준, 최대수령금액)	142.5만원/월	146.3만원/월
	차상위 긴급복지	10.4만 가구	11.5만 가구
	에너지바우처(냉방)	67.3만 가구	70.2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18.1만호	19만호
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 (차상위 ~ 소득하위 70%)	25만원/월	30만원/월
	활동지원바우처	9.1만명	9.9만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5천명	8천명
아동	육아휴직 등 지원금	1.5만명	2.0만명
	아이돌봄 지원	720시간/연	840시간/연
	초등돌봄	40.8만명	45.9만명
노인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40~70%)	25만원/월	30만원/월
	노인일자리	74만명	80만명
	고령농가 농지연금	13천가구	14천가구
	디지털 돌봄	2.5만명(추경)	5.8만명
유공자	전상수당	2.3만원/월	9만원/월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 (최대수령금액)	600만원/월	618만원/월
구직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	46.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14만명	19만명
	구직급여	137만명	164만명

【 생 계 】

- (기초생보)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 단계적 인상 (향후 6년간 年 2%p)
-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 차등 적용
* 기준중위소득: (1인) 176→183만원(+7만원 +4.02%), (4인) 475→488만원(+13만원 +2.68%)
-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4.3→4.6조원)
* ('21) 노인·한부모 가구(+15.7만 가구) → ('22) 전면 폐지(+2.5만 가구)
- (긴급복지)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 확대(10.4→11.5만 가구, +200억원)
- (자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5.8만명)의 자활급여 인상(1.5%) 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5,807→5,956억원, +149억원)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2.3→3.3만가구,
+102억원)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67.3→70.2만가구, +2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생계급여	43,379	46,07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7만 가구) 등
- 긴급복지	1,656	1,856	· 지원대상 확대(10.4→11.5만 가구) 등
- 자활사업	5,807	5,959	· 자활급여 인상(+1.5%) 등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767	869	· 냉방물품 대상 확대(2.3→3.3만 가구) 등
- 에너지바우처 (난방·냉방 에너지바우처)	781	803	· 지원대상 확대(냉방 67.3→70.2만 가구)

【 의료 】

- (의료급여) 취약계층(151만명)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7.0→7.7조원)
 -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296억원)하여 적정진료 보장
 -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도입
(500명, +15억원)
- (건강·요양보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10.2→11.0조원)
 -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뒷받침(9.0→9.5조원)
 -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1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의료급여	70,038	76,805	· 정신과 입원 행위별수가 전환, 재가 의료급여 시범도입 등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89,627	95,000	· 급여항목 확대 · 국고보조비율 14→14.3%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국고지원)	12,414	15,186	· 국고보조 법정비율 20% 지원

【 주거 】

- (공적임대) 청년(4.5→5.0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중심 공급확대
(18.1→19.0만호) 및 단가 인상(건설 5% 등)으로 질적 제고(16.4→19.0조원)
 - 기존 노후임대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업그레이드(1.0→8.2만호)
 -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도입(0.4만호, 1,705억원)
- * 중위소득 130% 이하, 시세 35~80% 임대료, 가구원수별 면적 공급(18~56m²)
-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 용자 신설(400호, 200억원)

-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3.1만 가구, 467억원)

-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95~100%로 현실화(1.6→2.0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공적임대주택	163,664	189,922	· 당초 '21년 목표(18.7만호) 대비 0.3만호, '20년(18.1만호) 대비 0.9만호 추가 공급
○ 주거급여지원	16,305	19,879	· 임차급여 수급자수 106.9→118.2만 가구 · 기준임대료 월 14.1→15.5만원
- 청년 분리지급	-	467	· 신규 3.1만가구, 월 +15.4만원

【 교육 】

- (고교무상교육)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0.7→0.9조원)

- 교육급여 단가인상(평균 +20%) 및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 신설

- (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1.5만명, +467억원)

-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31억원)

- (원격교육확산)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신규, 450억원)

- 저소득 성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로 개편 추진(34→7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고등학교 무상교육	6,594	9,431	· 무상교육 초·중·고 확대(88→124만명)
- 교육급여	1,016	1,030	· 통합급여로 전환(용도 자율화)
- 원격교육 활성화	34	524	·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확대 · 장애학생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등
- 근로장학금	3,282	3,681	· 대학생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10.9→12만명)
- 희망사다리Ⅱ 장학금	385	456	· 고졸 재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확대(16→20천건)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107	1,669	· 직업계고학생이 중소기업 취업시 지원 장려금 단가 인상(400→500만원)
-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체육 강습	-	10	· 생활체육 강습 100개소 신규지원(2,000명) · 가족동반 캠프 34회 추진
- 행복나눔 스포츠 강습	22	33	· 강습 종목확대(10→17개종목)에 따른 지원 인원 확대(3,000→5,100명)
- 찾아가는 발레교실	-	10	· 10개권역에 10개교실(9개월 지원)

2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장애인 】

- (소득지원) 수급자 전체 대상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429억원)
* 지급단가 인상(25→30만원): ('20) 기초생보수급자·차상위 → ('21) 소득하위 70% 전체
- (활동지원) 장애등급제 폐지소요 등 지원대상 확대(9.1→9.9만명, +0.2조원)
 -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 대폭 인상(시간당 14,500원→15,520원, +7.0%)
- (근로참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22→25천명, +181억원)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5→8천명, +604억원), 출퇴근비용 신규지원(6천명, +3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장애인연금	7,862	8,291	· 수급자 전체(38만명) 월 30만원 지급
- 장애인활동지원	13,057	14,991	· 지원대상 확대(9.1→9.9만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1,415	1,596	· 장애인일자리 확대(22→25천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948	1,552	·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	31	· 최저임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 6천명 신규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15	· 지정병원 운영비 신규지원(75억원 × 2개소)

【 농어민 】

- (농가소득)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 고려 고령농 연금지급 확대(13천명, 1,479억원 → 14천명, 1,809억원)
 -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해 농가의 농지매입 확대(1,400ha, 2,800 → 1,419ha, 2,979억원)
- (어가소득)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年 150만원 보장 등 소득안정 지원(515억원)
- (경영자금)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보강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수산 공익직불제	228	515	· 2톤이하 어선어업인 연간 150만원 지원
- 농업 공익직불제	23,610	23,610	· ha당 연간 205~100만원(05ha이하는 120만원) 지원
- 농지연금	1,479	1,809	· 수급자 확대(13→14천명)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3,446	3,482	· 국민연금 지원 기준소득액 97→100만원 인상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800	2,979	· 매입규모(1,400→1,419) 및 단가(200→210백만원/ha)
-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	-	1,300	· 농신보 기금 법정운용배수내 관리

【 보훈 】

- (보상금)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보상금 3% 인상**
* 공무원보수인상률(0.9%), 최저임금인상률(1.5%)
- (사각지대 해소)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 대폭 인상(23→90천원/月, +470억원)
 - 6.25자녀수당을 3% 인상하고,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 추가 인상*

*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5%로 인상(현재 20%수준 270→347천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보상금	29,444	30,593	· 보상금 3% 인상(19.2만명 수혜)
- 전상수당	165	635	· 전상수당(23→90천원) 인상(5.8만명 수혜)
○ 6.25자녀수당	2,730	2,886	· 제적·승계자녀수당 3% 인상(3.4만명 수혜)
- 신규승계자녀수당	379	504	· 신규승계자녀수당은 제적자녀수당의 25% 수준(270→347천원)으로 인상(+125억원)
○ 고엽제수당	3,008	3,056	· 고엽제수당 3% 인상(3.7만명 수혜)

【 다문화·정보취약계층 】

- (다문화·외국인)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사(174→208명),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282→312명) 확충(60→73억원)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화합공간 조성(16개 지역, 신규 22억원)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인터넷망 구축(574개소, +37억원), 공공 Wi-Fi 확충(1.5만개소, +630억원)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1,000개소, 72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다문화 사례관리·통번역 지원	60	73	· 지원 인력 확충(사례관리 174→208명, 통번역 282→312명)
-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	22	· 16개 지자체 x 2.5억원 x 50%
- 도서벽지 초고속인터넷망	-	37	· 연 574개소
- 공공 Wi-fi 확충	100	630	· 연 1.5만개소
-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	-	726	· 연 1,000개소

③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16.5→20.0조원]

-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두루누리, 신규 691억원)
 - * '21년도에 구직급여(예술인) 0.4만명, 출산급여(예술인·특고) 0.6만명 지원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9개 → 14개로 확대(27만명, +279억원)
 -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강사
- **고보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신규 0.8조원)
 - 구직촉진수당(月 50만원×6개월) 40만명(저소득 30, 청년 10만명)에 지급
 - 상담·직업훈련·일경험(신설, 2.9만명) 연계로 求職 적극 지원
 - * 직업상담원 증원, 고용센터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 0.1조원 투자
- **근로자 생활안정**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9.5→11.3조원)와 함께, 반복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병행 추진
 - * 구직급여 수혜자 : ('20) 137만명 → ('21) 164만명, +27만명
 - ** 반복수급자 수급요건 강화, 보험료·구직급여액 조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 위한 체당금 소요도 선제적 확대(9.6→13.5만명, 0.4→0.7조원)
 - 산재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급여 확대(5.9→6.5조원)
- **직업훈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하고,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 집중양성트랙 신설(0.4→0.5조원)
 - * 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9만명 → 13만명)
 - 모든 폴리텍 캠퍼스(35개)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비대면 인프라 확충(73→409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0	8,104	· 예술인·특고 신규 지원(46.5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2,771	8,286	·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청년 120%)에 구직수당(50만원×6月),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급여	95,158	113,486	· 수급인원 증가(137 → 164만명)
- 체당금 지급	4,335	6,698	· 지원인원 확대(9.6 → 13.5만명)
- 산재보험급여	59,046	65,236	· 특고 5개 직종(27만명) 추가('20.7월)
- K-Digital Training	953	1,390	· 신기술 범용기초훈련 확대(1.0→1.7만명)

4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 극복 】

- **보육인프라**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3.0%, 3.4조원), 보조·대체교사 확대(5.5→6.2천명, +970억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600개소,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529개소, 752억원) 등 **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등 급식안전 관리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8,592개소, 30억원) 지원
- **돌봄사각지대 해소** 시간제 보육(+200개소, 7.5→9.6만명)과 공동육아나눔터(+64개소)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 확충
 - 아이돌봄 지원시간(연 720→연 840시간) 확대 및 돌보미 양성(4→8천명)
- **초등돌봄 확대** 학교돌봄교실(+700실, +1.4만명), 초등교실 활용 돌봄(+750실, +1.5만명),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2.2만명) 확대
 - * 초등돌봄확대 : ('20) 40.8만명 → ('21) 45.9만명 → ('22계획) 53만명
- **주거지원** 신혼부부(5.2 → 6만호, +1.5조원) 및 청년(4.5 → 5만호, +0.5조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일·가정양립** 맞벌이 근로자 육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 위라벨 일자리장려금(0.8→1만명, +38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0.8→1.1만명, +86억원), 육아휴직 등 지원금(1.5→2만명, +141억원)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3,319	4,289	• 보육지원체계 개편지원(5.5→6.2천명)
-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	1,500	1,361	• 공보육 이용률(32%→36%), '22년 40% 목표
- 시간제 아이돌봄	1,408	1,554	•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8.2→8.4만 가구)
- 시간제 보육	166	216	• 이용인원 확대(7.5→9.6만명)
- 초등 방과후 돌봄	472	605	• 초등돌봄 인원 확대(40.8→45.9만명)
- 신혼·청년 임대주택	100,926	121,319	• 공급물량 확대(9.7→11만호)

【 고령화 대응 】

- **소득지원** 은퇴 후 소득공백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598만명, +1.8조원)
 - * 국정과제 목표 달성('21년 월 30만원 지급)
 - 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목표(당초 '22년) 조기달성 (74→80만명, +0.1조원)
- **돌봄고도화**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 확대 및 차세대·비대면 돌봄서비스 고도화 뒷받침
 -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45→50만명, +455억원)
 - * '20년부터 기존 6개 노인 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IoT·AI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등 비대면 건강관리, 집단 거주시설(노인·장애인)의 디지털돌봄 확대 (2.5→5.8만명, +75억원)
- **실버산업**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 촉진
 -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R&D 확대(+115억원)
 - 고령친화제품 신규 개발 지원 리빙랩(신규 9억원), 유망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 신설(20개사, 신규 6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기초연금 지급	131,765	149,635	• 수급자 전체(598만명) 월 30만원 지급
- 노인일자리	12,015	13,152	•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	4,183	• 맞춤돌봄 대상 확대(45→50만명)
- 디지털돌봄 시범사업	47	122	• 시범대상 확대(2.5→5.8만명)
- 치매 예방치료 연구개발	60	174	• 연구과제 확대(23→40개)
- 고령친화산업지원	17	23	• 유망기업 지원 바우처 신설(20개사)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18.2→20.7조원)]

① 일자리: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쏙단계 지원 [3.0→3.9조원, +29.5%]

- ①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年90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명(180만원×6개월) 지원
- ② (구직지원) 청년 10만명 대상 구직수당(50만원×6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상담·훈련·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 제공(13만명)하고, 문화예술·스포츠·식품 분야별 인턴십 지원(795명, 66억원)
- ③ (취업역량강화)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신설(1,048억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재 6.3만명 양성(4,677억원)
 -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차세대 청년 문화·예술인력 육성 지원 확대(1,576→2,766명, 161→242억원)
- ④ (창업지원) 민간주도 창업(TIPS) 확대(신규300→400개社), 전통문화분야 창업 지원 확대(75→100팀, 26억원)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창업 쏙단계 패키지 방식 지원(932억원)

② 생활안정: 주거·금융·자산형성 지원 [11.2→12.3조원, +10.5%]

- ① (주거)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4.5→5.0만호) 및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3.1만가구, 신규 467억원)
 - 버팀목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확대(2.3→2.8조원),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용자 지원(신규, 400호, 200억원)
- ② (금융) 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youth 1,330억원 공급(200억원, 1인당 최대 1,200만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2.45조원)
- ③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지원(1.28→1.40조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月30만원×3년, 8,035명), 청년농 정착금(月 100만원, 5,000명) 지급

③ 교육복지: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 지원 [4.0→4.5조원, +11.6%]

- ① (선취업후진학)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1.9→3.1만명, 768→1,330억) 및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16→20천명, 385→456억원)
- ② (장학금) 교외근로장학금(4.9→6.0만명), 인문100년장학금(2.4→3.4천명), 꿈사다리장학금(2.4→3.2천명) 등 확대
- ③ (장병복지) 급식비 인상(8,493→8,790원/일), 병사 군단체실손보험 시행(신규, 134억원), 이발비 月 1만원 지원(신규, 421억원) 등

[4]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 정책과제

- 산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 등 국민위해요인 증가에 대처한 사전 예방·치유 인프라 확충
 - * 아동학대신고(천건): ('15) 19.2 → ('16) 29.7 → ('17) 34.2 → ('18) 36.4
여성의 평생 성폭력 경험률(%): (신체적성폭력) 18.5, (불법촬영) 0.5, (성희롱) 9.8
- 기후·환경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공기·먹는물 등 기본생활 인프라 개선
 - * 초미세먼지(3월, 서울, $\mu\text{g}/\text{m}^3$): ('15) 30, ('16) 32, ('17) 36, ('18) 31, ('19) 39, ('20) 21
-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군장병 사기진작과 전투력 강화, 핵심무기체계 구축 등 지속 투자 필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천명)]



[국방비 추이]



◇ 재정지원 방향

- 국민생명 지키기·국민생활 청정화 프로젝트 등 집중 투자
- 국방전력 강화, 전략적 외교·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적정투자 지속확대

K방역	국민생명·인권보호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고도화 예방→진단→치료 초주기 방역시스템 보강	국민생명 ①교통안전 환경개선 ②산재사망 50% 감축(·22년) ③자살예방 등 정신건강관리	공기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보일러 교체 감시시스템 고도화
산업화 ①백신·치료제 신속개발 ②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③데이터중심병원 육성 등	수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①풍수해, ②산사태, ③하천, ④댐 안전관리 강화	물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오염지류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세계화 국제인증 수출지원 수출연계 공적원조 확대	인권 ①아동학대, ②디지털성범죄,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공간 ①도시숲확대, ②국토대청소, ③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스마트강군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방위전력 ①첨단무기체계 보강 ②핵심기술부품 조기국산화 ③민·군 방산협력 강화	외교 재외공관을 한류홍보에 활용 디지털·비대면 외교 전환
전투역량 ①첨단전투장비 보급·확산 ②AI활용 무인경계시스템 ③VR-AR활용 과학화 훈련	ODA 신남방·북방 중심 융합 ODA 확대
사기 급식, 피복, 자기개발 등 장병사기진작 패키지지원	남북 남북철도연결 등 자체 수행가능 사업 추진

◇ '21년에 달라지는 모습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년	'21년
K-방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	1,000개소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40개소	52개소
	바이오·특수전문의료 인력양성	-	270명
	K-방역 국제표준모델	1개	15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무인교통단속장비	0.4만 개소	0.8만 개소
	산업현장 위험기계 전면교체	-	3,634개소
	독거노인 우울증 케어 프로그램	0.8만명	1만명
수해예방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807개소	2,025개소
	사방댐 설치	296개소	390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0.5만 개소	1.9만개소
생활환경 청정화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지원단가 인상	50만원	60만원
	오염지류 수질측정	-	10개소
	스마트 그린도시	-	25개소
스마트 강군	첨단기술·부품국산화	0.4조원	0.7조원
	해안군부대 무인경계시스템	41식	1,018식
	병 인건비(병장기준)	54만원/월	61만원/월
전략적 외교협력	재외공관·문화원 해외 플랫폼화	-	13개소
	ODA 융합예산	17개 부처 70개 프로그램	19개 부처 86개 프로그램

- **고도화**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사전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 보강(0.5→0.6조원)
 - * '20년 추경·예비비(2.9조원)를 통해 음압병상 등 인프라, 비축물자 등 적정수준 既 확보
 - (사전 예방) 개인보호구(600만개), 항바이러스제(1,295만명분) 등 비축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17→47억원)
 - 노인·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약 1,500만명), 노인폐렴구균 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지원 확대(3,387→3,478억원)
 - (진단) 호흡기전담클리닉 2배 확대(500→1,000개소, 500억원),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99억원)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 구축
 - (치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3개소, 301억원), 감염병 대응시설·기능보강(1,683억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밀착형 치료체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권역(12→17개소)·지역(28→35개소) 책임의료기관 확대(42→105억원)
- **산업화** ①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②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③데이터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0.4→0.9조원)
 - (신약개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 확대(신규 452억원) 및 임상단계 맞춤지원(0.2조원)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및 백신연구 본격화(137억원)
 - (인재양성)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30억원, 100명), 의료인력 양성 기반** 구축(신규 22억원, 170명)
 - * 아일랜드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습중심의 학위과정과 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 ** 의과학자(70명), 역학조사관(100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연구실습비 지원
 - (ICT융합) 바이오분야 빅데이터·AI 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4억원), 의료정보 표준화·교류 지원(79억원)

- **세계화** ①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출지원, ②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연계 공적원조 확대(0.25→0.34조원)
 - (수출확대) K-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예: 유럽 CE-MDR), 국제표준·인증 획득지원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113억원)
 - (보건ODA) 해외 감염병 병원 건립, 의료기자재·백신치료제 보급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 원조 확대(0.2→0.3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고도화	5,311	6,307	
- 국가예방접종실시	3,388	3,478	· 노인·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무료접종(1500만명) · 민간 의료기관내 노인 폐렴구균 접종 지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추경 500)	500	· 호흡기클리닉 2배 확대(500→1,000개소)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39	301	· 영남·호남·충부권역 3개소 착공
○ 산업화	4,066	8,506	
- 코로나백신·치료제 임상지원	- (추경 940)	1,378	· 백신 12개, 치료제 10개 임상지원
- 국가신약개발사업	-	452	· 다부처 연계 전주기 신약개발(129개 과제)
- 감염병예방치료 기술개발	255	468	· 법정감염병 현장 진단기술, 백신치료제 등 기술개발(30여건)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593	1,107	·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신설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932	1,864	· 미래기술융합 의료기기 신규 47건 개발 착수 (AI의료영상분석, 미세정밀수술로봇 등)
-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65	170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5개소 지원 강화(개소당 10→18억원) 등
- 바이오-ICT 융합 촉진 등	189	195	· 데이터중심병원(5개소, 94억원) · 의료정보 표준화·교류기반 강화(79억원)
○ 세계화	2,516	3,440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2	14	· 표준물질·모델 등 15개 개발
- 보건의료ODA	2,488	3,327	· 우즈베크 의료기자재 공급(200억원) · 키르기스스탄 국립감염병병원 개선(89억원)

[한류 확산(K+X) 지원 예산]

① K-문화: 신한류 인프라·콘텐츠 확산 [0.11→0.19조원, +67.1%]

- ① (한류문화 확산) 재외문화원 한국문화제 개최(10개소), 한류동호회 문화교류활동 지원, 신남방·신북방(14개국) 중심 한국어 보급 확산, 우수 정책사례·발전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654→887억원)
- ② (한류콘텐츠) 공연·드라마 등 한류콘텐츠 개발·진출, K-Pop·K-드라마 활용 한류관광 프로그램, 한류콘텐츠 연계상품 해외진출(295→359억원)
- ③ (인프라 조성) 온라인 실감형 K-Pop공연장(1개소) 및 실감콘텐츠 해외 체험관(4개소) 조성, 재외공관 외벽 미디어아트(7개소) 설치(188→654억원)

② K-방역: 방역선도국가 위상 확립과 해외진출 촉진 [0.25→0.34조원, +36.7%]

- ① (방역모델 확산) K-방역모델·제품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지원 및 국제수준의 성능시험 인프라 확보(28→103억원)
- ② (보건 ODA) 해외감염병 병원 등 인프라 건설, 의료기기·백신 치료제 보급 등 보건의료 ODA 강화(2,488→3,327억원)

③ 브랜드K: 세계로 진출하는 국가브랜드 육성 [0.11→0.14조원, +21.4%]

- ① (제품선정) 브랜드K 제품(200개) 선정·관리 확대(4→62억원)
- ② (판로개척) 브랜드K 제품 글로벌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984→1,114억원)
- ③ (품질관리) 화장품, 식품 등 주력상품에 대한 인증·컨설팅 등의 품질관리 지원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129→179억원)

④ 기타 K-건축/뷰티/농식품 [0.02→0.04조원, +86.9%]

- ① (K-건축)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6개소), 재외공관 신축시 전통건축 양식·디자인 접목(6개소) 등(3→76억원)
- ② (K-뷰티) K-뷰티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K-뷰티 체험·홍보관 설립 등 인프라 확충(56→83억원)
- ③ (K-농식품) 스마트팜 수출패키지(교육 등) 지원(2→3개국) 및 한식 글로벌화를 위한 외국어 표준 메뉴판 보급(6,000개소, 신규)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1.9→2.7조원]

- (교통안전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0.8만개 확충 및 위험도로 210개소 개량 투자 (1.7→1.9조원)
- (산재예방) 사망사고 50% 감축(~'22년)을 목표로 위험기계·공정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용자 등 지원 (6,748개소, 0.1→0.7조원)

- (3대 위험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전면교체(3,634개, 신규 0.2조원)
- (뿌리산업 위험공정) 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공정 개선(1,284개소, 신규 0.1조원)
- (산재예방시설용자) 300인 미만 사업장 용자(1,830개소, 0.1→0.3조원)

- (정신건강)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 확충 (0.1→0.13조원)

- 코로나 확진자·의료진 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인 100명 신규배치(+224억원),
- 소방관 스트레스 관리(0.9만명, 67억원), 독거노인 우울증 케어프로그램(0.8→1만명)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768	2,496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3,700→8,227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3,634	• 미인증 위험기계기구 교체 4,911대 • 뿌리산업 공정개선 1,284개소
- 산재예방시설 용자	1,228	3,228	• 산재예방품목 용자 696→1,830개소
- 자살예방 문화조성	291	348	• 자살예방전담인력 207→314명

【 수해예방 】

[2.1→2.6조원]

- (풍수해)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지원(1.4→1.6조원)

- IoT기반 조기경보시스템 170개소 구축('20~'22년 510개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20→35개소)
-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 개보수(5,381→6,065억원) 등

- (산사태) ①사방댐 추가 설치(296→390개소), ②산사태 발생 우려지 조사 확대(기초조사 0.5→1.8만 개소, 실태조사 900개소(신규), 562→778억원)

- (국가하천관리) 73개 국가하천 제방보수,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22년까지 3,580개소)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0.6→0.8조원)
- (댐관리) 댐 안전감시체계 구축 및 안전성 보강(380→678억원)

- (안전감시체계) '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디지털 트윈·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실시간 안전감시체계 구축(총사업비 1,061억원, '21년 150억원)
- (안전성 강화) 14개 용수전용댐(총사업비 2,803억원, '21년 380→396억원), 15개 다목적댐(총사업비 6,013억원, '21년 신규 24억원) 등 안전성 강화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재해위험지역정비	4,365	5,119	• 조기경보시스템('20~'22) 510개소 • 풍수해생할권종합정비 20→35개소
- 수리시설 개보수	5,381	6,065	• 저수지 제방붕괴 사전계측(30→200개소) 등
- 사방사업	553	740	• 사방댐 296→390개소
- 국가하천관리	5,514	8,057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누적) 807→2,025개소
- 스마트댐 안전관리	13	150	• 디지털트윈·드론 기반 관리체계 37개댐

【 인권보호 】

-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71→81개), 학대피해아동 쉼터(76→86개) 증설(285→362억원)
- (여성) 피해영상삭제, 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 피해자 상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90억원)
- (수사피의자) 휴대용 DNA 분석기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및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 등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
 - *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 등 신규도입
 - *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확충(+10개, 검찰) 및 사무·조사 공간분리(168→263억원, 경찰)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아동학대피해자보호	226	284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71→81개소) 및 심리치료 전담지정기관(17개) 운영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9	78	•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86개소) 등
- 디지털성범죄 대응	131	221	• 상담 및 삭제지원,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
- 전용조사실확충(검찰, 경찰)	168	268	•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확충(검찰) 및 사무·조사공간 분리(경찰)
-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경찰 과학수사장비	157	215	• 휴대용 DNA 분석기, 훼손지문 분석장비 등

③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실시 [2.2→3.0조원]

【 깨끗한 공기 】 [1.0→1.3조원]

- (산업) 시멘트 업종(12개소, 3,600억원 용자), 소규모 사업장(3천개소, 1,500억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0.2→0.5조원)
- (수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30→33만대)·DPF 부착(8만대), 화물차·통학차량 LPG 전환(1.6→3.2만대) 등 공해저감 투자 확대(0.4→0.5조원)
- (생활)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 보일러 지원금액 상향(50→60만원, 5만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도로청소차 보급(164대, 216억원)
- (감시) 드론·이동측정차량, 원격감시장비 등 감시 고도화(90→17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청정대기시설 개선지원	-	3,600	· 시멘트 사업장 12개소(용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2,200	1,510	· 4,000 → 3,000개소 · 상가 가스히트펌프 180개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96	3,168	· 30만 → 33만대(160만원, 60%)
- 노후경유차 DPF 부착	1,383	1,520	· 8만대(3.8백만원, 50%)
- LPG화물차 신차 구입	200	400	· 1만 → 2만대(4백만원, 50%)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150	300	· 6천 → 1.2만대(5백만원, 50%)
-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150	180	· 5만대(50만→60만원, 60%)
- 도로청소차 보급	216	216	· CNG 134대, 전기 30대
- 첨단감시장비 도입	90	174	· 이동측정차량 6대, 드론 29대, 원격감시장비 10대, 무인비행선 3대
- 민간 불법감시단	149	149	· 1,000명(사회서비스 일자리)

【 맑은 물 】 [0.9→1.1조원]

- (상수도) 전국 광역(189억원)·지방상수도(4,246억원, 72개 지자체)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0.3→0.4조원)
 - 노후 지방상수관망·정수장 정비(4,580→4,531억원), 유출 방지 등 지방정수장 위생관리(신규 262억원) 지원
- (수질개선) 오염 분류·지류 수질측정망 고도화(10개, 신규 60억원) 및 하천구조물 개선 시범사업 추진(조사 800개소, 개선 25개소, 시범 115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광역상수도 스마트화	- (추경 156)	189	• 취수원 수질감시 24개소, 정수장 스마트화 8개소, 스마트 관망 14개소
- 스마트 지방상수도	2,716	4,246	• 72개 지자체 착공, 44개 지자체 완공
- 노후 상수도 정비	4,580	4,531	• '24년까지 관망 113개소, 정수장 36개소
- 정수장 위생관리	-	262	•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 (특광역시 30%, 기타 50%)
- 수질측정망 고도화	-	60	• (지류) 소규모 측정망 10개 지류 • (본류) 다기능 측정소 3개소
-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	115	• 용도폐기 시설 대상 800개소 조사, 25개소 개선

【 녹색공간 】

[0.4→0.6조원]

- (도시 그린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1,045→1,557억원)
 - * ①어린이보호구역 內 자녀안심 그린숲(신규 50개소, 50억원), ②바람길숲(17개, 580→800억원), ③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확대(+38개, 465→707억원)
- (국토 대청소) 도시 생활폐기물, 농촌 가축분뇨, 해양쓰레기 등 생활환경 저해요소 처리 투자 대폭 확대
 - * ①재활용품 비축창고(2개소, 94→260억원),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1개소, 23억원)
②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750→1,000개소), ③해양쓰레기 수거(4,427→6천톤)
- (도시적응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5개소, 526억원),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41→199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도시숲 조성	1,045	1,557	• 자녀안심 그린숲 50개소(50억원) • 바람길 숲(17개소, 580→800억원) •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38개소, 465→707억원)
- 생활폐기물 친환경 처리	94	283	• 재활용품 비축창고 신규 2개소 •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시범 1개소
-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	1,013	1,103	• 750 → 1,000개소
- 해양침적 쓰레기 수거	85	108	• 수거량 4,427 → 6,000톤
- 스마트 그린도시		526	• 신규 25개소(개소당 69억원, 50%) * 1년차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30% 반영
- 온실가스 감축설비	41	199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74개사, 25개 지자체)

4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과 군 사기 진작 (50.2→52.9조원)

- **국방전력 고도화** ❶F-35A 등 전방위 안보위협대비 전력 보장, ❷핵심기술개발 및 부품국산화, ❸민·군 기술협력 등에 집중 투자
 - (전력보강) 핵·WMD에 대응한 핵심무기체계 구축(14.6조원)
 - * F-35A 도입완료, 차세대 국산전투기(KF-X사업) 및 잠수함(장보고Ⅲ) 등 전력보강
 - (핵심기술개발)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첨단핵심기술·부품 국산화 집중투자(0.4→0.7조원)
 - *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율 : ('15) 66.1% → ('18) 69.8% → ('22목표) 75%
 - (민·군 기술협력) 첨단 국방기술과 민간기술간 이전·연계를 위한 민·군 공동 R&D·기술상용화 투자확대(678→908억원)
 - 민간기술의 군 이전(Spin-on)과 더불어 군 기술의 민간 활용을 위한 사업 전 주기 지원 강화(Spin-off)
- **전투역량 강화** ❶첨단 전투장비 보급 확산, ❷AI 활용 무인 경계시스템 조기구축, ❸AR·VR기반 과학화 훈련 집중 지원
 - (첨단전투장비)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조준경·표적지시기·피아식별장비 등 위리어플랫폼 보급 확대*(1,147→1,209억원)
 - * ('20) 특전사·특공대 중심 → ('21) 대테러·보병부대 등 일반보병까지 지급
 - (경계시스템) 전 해안지역 및 내륙 중요주둔지(총 1,018식)에 AI 기술 접목 첨단 CCTV 설치(40→1,968억원)
 - (과학화훈련) 실전적 전투기술 숙달을 위해 AR·VR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화·실전형 훈련체계 구축 (501→538억원)
 - (부사관·군무원)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예 부사관 증원 및 비전투분야 전문 군무원 확충 지원
 - * 부사관 : ('20) 1,522명 → ('21) 2,315명(+793)
 - 군무원 : ('20) 3,273명 → ('21) 5,367명(+2,094)

- **軍 사기진작**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집중 지원 (3.5→3.8조원)

(단위 : 억원)

	지원내용	예산	
		'20년	'21년
계		35,002	38,481
①인건비	• 전년대비 12.5% 인상(병장기준 540.9→608.5천원)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단가인상(300→400만원)	21,081	22,480
②급 식	•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 민간조리원 확충(1,985→2,278명)	11,134	11,557
③피 복	• 기본(8종)·특수(4종) 피복 단가 인상	1,465	1,855
④자기개발비	• 자기개발비(연10만원) 지원대상 확대(8만→23.5만명)	80	235
⑤병사 군단체보험	•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실손 보험료의 80% 국가 지원)	-	134
⑥이발비용	• 이발비용 지원(月 1만원)	-	421
⑦독신자숙소	• 간부숙소 개선 및 신축(3,764→4,890실)	1,242	1,799

- **비전통적 위협 대응** 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군의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
 - (감염병 대응) 미세먼지 마스크 비축 (1인 48매), 쏘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군 병원 대응능력 보강 등(247 → 960억원)
 - (대테러 등) 대테러·대화생방 장비·물자 등 보강(143 → 544억원)
- * 대테러·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부대 추가 지정 ('20.2월 대테러특위)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 고
○ 국방전력 고도화	166,804	170,738	
- 전력보강	146,594	145,695	• F-35A, KF-X(보라매), 잠수함(장보고Ⅲ) 등
- 핵심기술·부품국산화	4,386	7,205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기술부품 국산화
- 민·군기술협력 강화	678	908	• 민군간 상호 기술이전(spin-on/off)
○ 전투역량 강화	1,688	3,715	
- 워리어플랫폼	1,147	1,209	• 특전사·특공대 → 대테러·보병부대까지 확대
- 경계시스템	40	1,968	• 해안·주둔지 AI기술 접목 CCTV 1,018식 설치
- 과학화훈련	501	538	• ARVR 가상훈련체계 6식, 과학화훈련장 6개소 등
○ 군 사기진작	35,002	38,481	• 병봉급 인상(12.5%), 급식·피복단가 인상 등
○ 비전통적 위협대응	390	1,504	• 감염병 대응 960억원, 대테러 장비 등 544억원

5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1.56→1.68조원]

- **전략적·소통외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강화, 현지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다면적 공공외교 지원(803→844억원)
 - *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6개소, 신규 73억원), 재외문화원 외벽 미디어아트 구현(7개소, 신규 100억원)
 - 한국의 모범정책 사례·발전경험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신규 67억원),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비대면으로 전환(신규 76억원)
- **한류·비대면 외교** 재외공관·문화원을 우리의 건축·기술·문화 등 한류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플랫폼으로 활용(신규 173억원)
 - 한국의 모범정책 사례·발전경험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신규 67억원),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비대면으로 전환(신규 76억원)
- **융합 ODA** 개도국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남·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 융합 ODA 확대(0.27→0.33조원)
 - (신남방) 미얀마 다리 건설(기재부, 161억원) + 교량 안전관리 역량강화(외교부, 11억원)
 - (신북방) 우즈베크 통합데이터센터(기재부, 92억원) + 교육·연수 등(행안부 등 21억원)
- **남북협력**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철도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핵심사업 단계적 지원 확대(508억원)
 - * 경원선 복원(백마고지-남방한계선, 475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33억원)
 - 남북간 평화·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보건·의료, 농축산·산림 등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 확대
 - * 민생협력지원: ('20) 4,511→ ('21) 5,131억원(+620억, +13.7%)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案	비고
- 공공외교	803	844	·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67억원(신규) · 한국학 기반확대 +20억원(+15.9%)
- 한류·비대면 외교	-	317	· 재외공관 6개소, 재외문화원 7개소 · 공공외교 디지털 콘텐츠 80건 제작 등 · 대면 초청 연수→온라인으로 전환
- 융합 ODA(다부처)	2,733	3,258	· 19개 부처, 86개 프로그램(+16개) · 신남북방 프로그램 +20개, +510억원(+288%)
- 남북협력기금사업	12,030	12,408	· 민생협력지원 +620억원(+13.7%) · 경협기반(무상) +102억원(+4.3%) · DMZ 평화적 이용 +13억원(+10.0%)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 · 통일 분야
11. 공공질서 · 안전 분야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공고화
-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대비 선제대응 투자 확대
- ◇ K-방역 고도화, 글로벌 선도 지원 및 국민건강 투자 확대

①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21년 15.7만 가구, '22년 2.5만 가구)
 -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단계적 인상* 및 1~2인 가구 중심으로 인상률 차등적용**
 - * 향후 6년간 年2%p 인상, ** '21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 1인 4.02%, 4인 2.68%
- 취약계층(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급자 중심 서비스 質 제고
 - *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296억원), 재가의료급여 시범도입(500명, +15억원)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규 3.1만 가구, 467억원),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95~100%로 현실화하는 등 주거급여 개선
- 단가 인상(평균 +20%) 및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 신설로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추진
-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확대(10.4→11.5만 가구)

② 장애인 및 소외아동·청소년 지원

- 장애인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완화를 위해 ①장애인 연금 인상, ②장애인활동지원 확대, ③경제적 자립·근로참여 집중지원
 - * 지급단가 인상(25→30만원): ('20) 기초생보수급자·차상위 → ('21) 소득하위 70% 전체
- 학대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수 확대 및 쉼터폐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월 30만원, 3년간)
 - * 학대피해아동쉼터 : ('20년) 76개소 → ('21년) 86개소 (+10개소)

③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고령화 대비 투자 강화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9.7→11만호)
- 임신·영아기 건강한 출발을 위한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 확대(20→50개소) 및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신규5개소)·운영(22→26개소) 지원 확충

- 공보육과 초등돌봄* 강화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간제보육·아이돌보미 등 확대
 - * 공공보육 40% 달성('21년 36 → '22년 40%), 초등돌봄 아동 53만명 달성('17년 33 → '22년 53만)
- 안정적인 노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수급자 전체 月30만원) 및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74→80만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45→50만명) 및 디지털돌봄 시범사업 확대(2.5→5.8만명) 등 추진

④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육성 지원

-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10.2→11.0조원)
-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암 Daycare센터(78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3개소, 301억원) 등 확충
 - * 권역(12→17개소)·지역(28→35개소) 책임의료기관 확대
- 바이오-ICT융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중심병원(94억원, 5개소)·스마트병원(30억원, 3개소) 구축 및 한국형NIBRT 등 핵심인력 양성(52억원)

⑤ 공적임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청년(4.5→5.0만호), 신혼부부(5.2→6.0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 19.0만호로 0.9만호 확대(16.4→19.0조원) 등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39,659	153,095	▪ 생계급여 +2,699억원, 의료급여 +6,767억원
▪ 취약계층지원	39,603	45,185	▪ 장애인활동지원 +1,934억원
▪ 공적연금	554,491	604,793	▪ 국민연금급여지급 +29,082억원
▪ 보훈	57,345	58,383	▪ 보상금 +1,150억원, 현충시설건립 +364억원
▪ 주택	297,314	336,465	▪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19,396억원
▪ 사회복지일반	14,215	14,703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8억원
▪ 아동·보육	85,127	85,150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814억원
▪ 노인	166,323	188,588	▪ 기초연금지급 +17,869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10,950	11,466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6억원
▪ 고용	222,759	257,092	▪ 구직급여 +18,328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1,563억원
▪ 노동	77,133	92,226	▪ 산재보험급여 +6,189억원
▪ 고용노동일반	5,291	5,574	▪ 지방고용노동청 청사취득 +40억원
▪ 보건의료	27,694	32,231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R&D) +1,314억원
▪ 건강보험	101,956	107,988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373억원
▪ 식품의약품안전	5,568	6,020	▪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51억원
합 계	1,805,430	1,998,959	10.7% 증가

〈참고〉 일자리 분야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및 고용서비스 질(質) 제고
- ◇ **全 취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
- ◇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일자리 안전 등 업무여건 개선 지원

□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

- (직업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및
민간훈련기관 공동활용 비대면 인프라 확충*

* 취업생, 재직자 등 전국민 대상 무료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개)

- (일자리 창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국내
복귀기업 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 장려금 지원

- (고용서비스) 고용센터 인력 보강 및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질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원활한 시행('21.1월) 위해 기간제 상담원 600명 한시채용,
고용서비스 전문상담사 자격제도 개편(16억원) 및 종사자 보수교육(4억원)

□ 전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 (두루누리) ‘21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위주 지원

* 예술인 3.5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

-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의 차질없는 이행 및 예술인·특수
형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위한 구직급여 지원

- (고보사각지대) 고보적용 확대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구직·생활안정 지원

* 구직 촉진수당 및 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 등을 통해 구직 지원

□ 구직자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신규 10만), 취업성공패키지(신규 13만), 청년디지털일자리(신규 5만) 등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 강화
-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을 위한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500개社)
*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업 담당자 교육 등 컨설팅 제공
- (노인) 소득보완 및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4.5만개 확대(74→78.5만개)
*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0.8만개 확대(3.7→4.5만명)
- (여성) 직장어린이집 확대(94개소) 등 여성 경제활동 뒷받침
- (장애인)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신규지원(6천명), 근로지원인 확대(5천→8천명) 등 장애인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투자 강화

□ 근로시간 단축, 산재 예방·재활 지원 등 사람 중심 근로환경 구축

- (일자리 안전) 미인증 고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공정 개선 지원, 사업장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2,350억원(4,911대), 뿌리공정 보유업종 지원 1,284억원(1,284개소), 산재예방시설 비용 융자지원 2,000억원(1,134개소)
- (일·가정 균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사업주 지원 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유도
* 워라벨일자리장려금(144→182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150→236억원), 육아휴직 등 지원금(360→501억원) 등 확대

(억원)

구 분	'20년	'21안	비고
▪ 직접일자리	28,587	31,164	▪ 자활근로 5.8만개, 노인돌봄 3.3만개, 장애인일자리 2.5만개 등
▪ 직업훈련	22,434	22,754	▪ 내일배움카드 확대(0.9→1.0조원)
▪ 고용서비스	11,994	17,694	▪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0.8조원)
▪ 고용장려금	64,950	82,697	▪ 고용유지지원금(0.04→1.2조원)
▪ 창업지원	23,585	26,342	▪ 창업기업자금(1.7조원), 창업사업화지원(0.4조원)
▪ 실업소득 유지·지원	103,447	125,387	▪ 구직급여(9.5 → 11.3조)
합 계	254,998	306,039	20.0% 증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 신산업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 혁신인재 양성 지원 강화

□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강의 환경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 강화

○ 초·중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대폭 확대 및 학습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 AI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신규) 92억원

○ 원격교육지원센터(대학)에서 온라인강의 제작·LMS 운영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강좌 및 국제학술 DB를 시·공간, 비용 제한 없이 접속

*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0억원(10개 원격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활용 학술DB 범위 및 이용시간 확대(저널 39→48개), 디지털 집현전 연계

○ 국립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설치로 교원 온라인수업 역량 강화 지원 및 최신 에듀테크 기술 체험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설치

*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79억원('20추경 10개소 → '21년 18개 추가 설치),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 총 80억원 지원('21신규)

○ 4차 산업혁명 수요 맞춤형 K-MOOC 강좌를 대폭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수요에 맞춘 온라인 교육과정도 확대하여 전국민에 공개

* (K-MOOC) 신규콘텐츠 대폭 확대(누적 885→1,055개) 및 해외 유명강좌 개설
(Match-業) 기업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누적 32→48개)

○ 저소득 초·중고생, 장애학생에게 수준·장애유형별 맞춤형 학습콘텐츠·제작인프라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수혜자 및 콘텐츠 확대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및 스튜디오 구축(+15억), 장애유형별 콘텐츠 개발(+70억),
장애대학생 원격교육 수강지원(+15억)

** 평생교육바우처지원 34(8천명) → 74억원(15천명)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분야 인력양성과 미래대비 교육환경 조성

-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간 융합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설(8개, 1,048억원)

* AI·자율주행차 등 8개 신기술분야별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선정, 교육과정 개발·공유 + 캠퍼스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외공개

- 신산업분야 기능인력 양성 및 고숙련 실무중심 인재(名匠) 육성을 위해 전문대 고등 직업교육 모델 구축 지원

* 신산업특화 전문대학(12개, 총120억원), 마이스터대(4개교, 총80억원) 신규 지원

- 지역 내 「인재 양성 → 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재양성 플랫폼(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개(1,080억원) → 4개(1,710억원)

-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노후학교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2,890동) 실시, ICT기반 스마트 교실 구축(21신규 868억원)

- 신산업·융합·포스트코로나(의학·생명공학) 대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고가·첨단 기자재 중점지원 및 동물실험 여건 개선

* 고가·첨단 기자재 364억원(69개) → 582억원(150개), 동물실험센터 신축(4개교)

□ 사학의 회계비리 근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 신규 추진(5교, 53억원)

* 사립대학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비용 및 회계투명성 강화,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604,126	584,654	▪ 교부금(553,722→533,221억원) ▪ 고교무상교육(6,594→9,431억원) ▪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40,316→36,547억원)
▪ 고등교육	110,139	113,189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1,080→1,710억원) ▪ 4단계 두뇌한국 21(3,840→4,216억원) ▪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3,689→4,522억원)
▪ 평생·직업교육	10,715	11,034	▪ 전문대학 혁신지원(3,908→4,110억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1,107→1,669억원)
합 계 (교부금 제외시)	726,344 (172,622)	710,260 (177,038)	2.2% 감소 (2.6% 증가)

- ◇ 신한류 지속 확산 지원 및 글로벌 지역관광거점 육성
- ◇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및 투자·소비 촉진
-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신기술 접목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한류의 지속적 확산 및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신한류 지원 확대

- 해외 현지 한류 프로그램 및 전략적 해외 한류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통한 한류 확산 지원

*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 80억원(10개국, 신규), 재외문화원 외벽 미디어 파사드 설치 100억원(7개, 신규),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장 290억원(신규)

- 전통공연·한국영화·드라마·문학 등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

*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20억원(4개소, 40→60억원), 전통공연 한류 콘텐츠 개발 16억원(신규), 한류관광 활성화 +28억원(62→90억원)

-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 보급 확대 및 한국어 교육 현지화

*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 확산 및 현지화 91억원(신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투자 및 소비 촉진 적극 뒷받침

- VR·AR, AI·IoT 등을 활용한 박물관·미술관 실감형 콘텐츠화 및 온라인 공연·전시·스포츠코칭 서비스 제공 확대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99억원(113개소, 267→366억원), 온라인 공연 +46억원(4→50억원), 온라인 스포츠코칭 +39억원(5종목, 신규)

- 문화·체육·관광 기업 재기·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지원 대폭 확대

* 문화콘텐츠·영화펀드 +258억원(1,370→1,628억원), 30대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 +36억원(15→51억원), 스포츠기업 융자 +400억원(662→1,062억원)

- 코로나 이후 문화·체육·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229억원(1,032→1,261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55억원(277→332억원), 숙박쿠폰 +142억원(290→432억원), 체육쿠폰 +58억원(122→180억원)

□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래객 체감형 **지역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거점 육성** 지원

-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內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빈틈없이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도입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503억원(1,371→1,874억원)

- **관광거점도시·스마트관광도시** 등 글로벌 관광지를 집중 육성하고,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브랜드화·특성화**

* 관광거점도시 육성 +224억원(159→383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87억원(45→132억원),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179억원(신규)

□ **생활체육 향유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 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적극 뒷받침

- 여성·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다문화청소년 체육강습 10억원(신규), 생활체육프로그램 +95억원(1,021→1,116억원), 국민체육센터 +172억원(2,553→2,725억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100억원(신규)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2032하계올림픽 유치 등 **차질없는 국제대회 유치·준비** 지원

*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40억원(신규), 2032하계올림픽 +20억원(20→40억원)

□ **신기술 접목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향유** 확대

- ICT·디지털 기술 기반 **수리이력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복원,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지원

* 문화재 수리이력 DB 50억원(신규),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15억원(신규)

- 궁능원·왕릉 등 대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85억원(140→225),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22억원(166→198)
(억원)

구분	'20	'21안	비고
· 문화예술	35,371	37,068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장(290억원, 신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267→366억원)
· 관광	13,491	14,859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1,371→1,874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159→383억원)
· 체육	16,961	17,491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1,021→1,129억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100억원, 신규)
· 문화재	10,911	11,241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140억원→225억원)
합계	80,181	84,241	5.1% 증가

- ◇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 3, 기초원천 R&D, 혁신인재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 집중
- ◇ R&D가 확대되는 만큼 R&D 투자의 성과 제고 노력 강화

□ 미래 먹거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본격 대비

- (디지털 뉴딜) AI·빅데이터·5G 등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정보보안, 블록체인 등 디지털 유망분야 R&D 투자 강화
 - * 6G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데이터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191억, 신규) 등
- (그린 뉴딜) 제로 에너지화, 생태 복원, 저탄소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확대
 -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671→975억), 고효율 건축기술(30→115억) 등

□ 소재·부품·장비 및 BIG3 산업 지속 지원 등 주력산업 고도화

< 뿌리부터 튼튼한 제조업 기틀 마련 : 소부장 >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하고 R&D 등 집중지원*
 - *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 ('20년) 2.1조원 → ('21년) 2.6조원
- AI·바이오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첨단 유망 소재·부품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공급 기업간, 부처간 전주기 협업 강화

< 혁신성장 3대 신산업 : BIG3 >

- (시스템 반도체) 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설계 및 신소재 개발 투자
 -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891→1,223억원, 과기부·산업부)
- (미래차) 친환경(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주행거리, 안전 등)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리드
 - * 현재(2세대) 400km 전후의 항속거리를 '25년(3세대) 600km까지 확장 추진

- (바이오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지원과 함께 감염병 대응* 투자 강화를 통해 국가보건의료체계 사각지대 보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투자 : ('20추경) 1,916 → ('21안) 2,478억원(+29.3%)

□ 혁신성장의 기초 강화 위한 투자 지속

- (기초원천 R&D)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 기반에 대한 투자 및 기초·전략 기술 등의 자립화 추진

* (국정과제 36번) 기초연구 2배 확대('17년 1.26 → '22년 2.52조원)

- (혁신 인재) AI분야 최고급 인재 등 석박사급 인재양성 투자 강화 및 BIG3 등 산업수요 분야별 특화 고급인재 육성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60억) 등

□ 부처간 협업 강화, 출연연 조직·사업 정비 등 R&D 효율화

- 다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융합과제를 대폭 확대(1.2→1.8조원)하고 이어달리기* 등 상호 연계되어 있는 R&D 과제의 효율화 제고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 등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 수행

(억원)

구 분	'20	'21안	비 고
▪ 과학기술 부문	72,225	78,533	· 개인기초연구(과기부)(12,408→14,770) · 나노소재기술개발(1,197→1,954)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58,230	66,966	· 소재부품기술개발(6,027→8,86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800→2,948)
▪ 교육 부문	23,105	24,471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3,374→4,904)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1,845→2,261)
▪ 사회복지·보건·환경	10,457	14,119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176→352)
▪ SOC 부문	8,883	10,130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73, 신규)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244→397)
▪ 기타 부문	69,295	77,782	· 핵심기술개발(4,015→6,318)
합 계	242,195	272,003	12.3% 증가

-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확대
- ◇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 등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 ◇ 포용적 자금지원 확충·新기술 적용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역산단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고도화 지원

- 7개 스마트산단의 혁신 가속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물류(3→4개)·에너지 플랫폼(추경신규 7개) 구축 확대
- 경자구역을 2개소 추가 지정(광주·울산)하고, 경자구역 2.0 도약을 위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30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목표(5,500→6,000개, 누적 2.4만개)를 상향하고, 고도화를 위해 지원단가 인상(Lv3 1.5→2억원, Lv4 4억원(신설))
 -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 대상 통합·연계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신설(3개소, 12억원)

□ 무역금융 보장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 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신사업 진출 등 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4조원 추가공급(무보 출연 0.3→0.4조원)
- 수출바우처(3,500→3,700개社)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IT 기술을 접목한 수출 지원 등 온라인 채널 활성화
- K-푸드·방역·컬처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설치 등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도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등 에너지 효율 강화

-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및 아직 초기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 지원(0.8→1.3조원)

- 수소 생산기지 구축(9개소),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16대)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를 중점 구축
-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225만호) 및 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1,200동)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및 비대면·디지털 벤처 사업화·인프라 등 집중 지원
 - 모태펀드에 1.7조원(예산 1.3, 회수재원 0.4)을 출자하여, 스마트 대한민국펀드(1조원 규모) 등 총 3.7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 유망분야를 지원하는 사업화 바우처를 신설(300개사)하고, 그린 유망 스타트업 100 신설(20개사)
 - * 중기부·환경부가 협업하여 3년간 100개사 선발, R&D·사업화자금 총 30억원씩 지원
 - 유망 스타트업들이 성장 거점이 될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 145억원) 및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2개소, 242억원)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혁신 지원
 - 지역신보 보증 19.5조원 확대(25.5→45조원),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1조원) 등 소상공인 융자 확대(2.3→3.6조원)
 - 경영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1,054→23,000개社), 스마트공방(20→600개社), 스마트슈퍼(신규 800개社) 보급 및 온라인 판로지원(313→734억원)
 - 전통시장 新마케팅을 위한 테마형 상권르네상스(13→19곳), 디지털 매니저(38→88곳) 지원 및 제로페이 전통시장 집중보급*
 - * 전통시장 전용 무선단말기 4만대 보급 신규지원(26.4억원)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무역 및 투자유치	10,182	11,996	· 무역보험기금출연 (2,960→4,000)
▪ 창업 및 벤처	44,011	49,174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9,000)
▪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84,448	118,677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3,300→17,50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38,751	46,104	· 신재생에너지보급·금융지원 (5,746→8,873)
▪ 산업혁신지원	47,325	54,894	· 소재부품기술개발(R&D) (6,027→8,866)
▪ 지식재산일반	3,223	3,457	· IP-R&D 전략지원(R&D) (319→404)
▪ 산업금융지원	2,640	365	· 산업구조고도화, 환경·안전투자(기은 출자) (2,640→365)
▪ 산업·중소기업 일반	6,575	6,767	
합 계	237,154	291,434	22.9% 증가

- ◇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및 관리의 디지털화
- ◇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드론, 수소도시, 자율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추진
-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적기 구축 지원

□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AI, 5G 등)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용하는 디지털화 추진

○ 도로·철도·항만 유지 보수 및 시설개량 투자 확대(3.3→3.7조원)

- * 도로유지보수: ('20) 6,262 → ('21안) 6,644억원(+382억원, +6.1%)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20) 11,479 → ('21안) 12,974억원(+1,495억원, +13%)
 항만시설유지보수: ('20) 1,658 → ('21안) 1,783억원(+125억원, +7.5%)

○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유도, 관리주체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성능개선비 지원(시범 20억원)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3개소 지정, 지능형교통체계(ITS&C-ITS) 구축 확대 등으로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

- * 첨단도로교통체계: ('20) 2,112 → ('21안) 5,785억원(+3,674억원, +174%)
 - 국도 ITS 구축(누적): ('20추) 4,361 → ('21안) 6,861km(전체 국도의 50% 수준)

○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를 디지털화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체계 구축

- (도로) '22년까지 모든 국도에 원격터널제어시스템 구축(370→406억원)
- (철로) 무인차상검측시스템 3대 도입(276억원)
- (하천) 국가하천 1,218개소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200→1,800억원)

□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드론,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스마트물류)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확충(95억원)
- (스마트시티) 27개 도시 대상 스마트기술 확산(269→1,034억원)
- (드론) 드론 실증도시를 4→7개소 확대(40→105억원)
- (수소)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 3곳 조성(125→245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 시설 연한이 15년~30년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추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신규): ('21안) 2,276억원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인증제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표준 주도 추진

* ('20년)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 ('23년) 공공 500㎡이상 → ('25년) 민간 1천㎡이상 → ('30년) 공공·민간 500㎡이상

**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육성: ('20) 24.5 → ('21안) 26.1억원(+1.6억원, +6.7%)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19.1월 발표)를 본격 추진하고, 국가 기간 도로·철도 간선망 구축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 23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을 집중관리 → 19개 기반시설 설계·착공 + 4개 R&D 실증·사업화 지원

* (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61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715억원) 등
(철도) 동해선 전철화(1,044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315억원) 등

-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적기 구축 지원

* 고속도로: 세종-구리 6,699억원(+2,137), 당진-천안 1,053억원(+119) 등
철도: 호남고속철도 2,000억원(+1,100), 이천-문경 4,012억원(+212) 등

- GTX,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 대도시권 교통망 개선 투자 확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0) 1,960 → ('21안) 2,656억원(+696억원, +35.5%)

* 대구순환 고속도로('21준공): ('20) 562 → ('21안) 1,056억원(+494억원, +88.0%)

(억원)

구 분	'20년	'21안	비고
▪ 도로	72,588	76,329	· 도로관리(2.1 → 2.6조)
▪ 철도, 도시철도	69,474	78,055	· 철도 건설(4.1 → 4.7조)
▪ 해운·항만	18,974	21,076	· 항만개발 및 관리(1.5 → 1.6조)
▪ 수자원	12,909	15,863	· 하천관리(0.6 → 0.8조)
▪ 지역 및 도시	24,474	30,814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신규 0.2조원)
▪ 물류, 항공, 산단	33,892	37,930	· 산업단지(0.3→0.4조), 항공·공항(0.3→0.4조)
합 계	232,311	260,067	11.9% 증가

- ◇ 청년농 지원, 스마트 농어업 등 농어촌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 ◇ 농수산물 및 외식 할인쿠폰 확대,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소비활력 제고 및 유통 혁신
- ◇ 한국판 뉴딜 및 재해예방 사업 투자 확대
- ◇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어업 등 농어업의 신성장동력화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2,500→2,800ha) 및 영농 정착금 지원 확대(4,800→5,000명)
 - * 맞춤형농지지원: ('20) 6,460 → ('21안) 7,718억원 (+1,258, 19.5%)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0) 314 → ('21안) 334억원(+20, 6.3%)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21년 완공, 스마트팜 임대규모 확대(4→6ha),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3→4개소) 등 농어업 스마트화 촉진
 - * 임대형스마트팜: ('20) 261 → ('21안) 477억원(+216, 82.8%)
 -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20) 8 → ('21안) 47억원(+39, 487.5%)
 - *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 : ('20) 145 → ('21) 166억원(+21억원, 14.5%)
- 지역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귀농귀촌 사업을 단계별로 패키지화하여 지원 확대(정보제공→6개월 미리살아보기→생활적응)
 -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20) 136 → ('21안) 217억원(+81, 59.6%)

□ 농수산물 소비 진작 및 유통 혁신

- 영세 외식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외식활성화를 위한 외식쿠폰 제공(소비효과 7,260억원)
 - * 외식쿠폰 : ('20 추경) 343억원 → ('21안) 670억원(+327, 95.3%)
-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소비쿠폰 제공(소비효과 6,000억원)
 - * 농수산물 소비쿠폰: ('20 추경) 620억원 → ('21안) 1,220억원(+600, +96.8%)
-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응, 효율적 유통을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 지원
 - *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49억원, 신규)
 - *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경매플랫폼(32억원, 신규), 축산업 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6억원, 신규)

□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투자 및 재해예방 투자 강화

- 농업용 저수지에 원격수문제어 시스템 조기구축('30 → '25년, 전국 27개 권역) 및 수질자동측정망 구축(~22년, 대규모 저수지 90개)
 - *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20) 177 → ('21안) 346억원(+169, 95.5%)
 - * 수질자동측정망 : ('20) 132(추경 신규) → ('21안) 155억원(+23, 17.4%)
- 어린이보호구역 內 자녀안심 그린숲(신규 50개소, 50억원), 농어촌 가축분뇨 처리 확대 등 생활공간 그린화
 - * 바람길숲(17개, 580→800억원),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확대(+38개, 465→707억원)
 - * 가축분뇨처리지원 : ('20) 1,013억원 → ('21안) 1,103억원(+91, 8.9%)
-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저수지 개보수 확대 및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 배수개선사업(준공 4,400ha → 4,700ha)
 - * 수리시설개보수 : ('20) 5,381 → ('21안) 6,065억원(+683, 12.7%)
 - * 배수개선 : ('20) 3,088 → ('21안) 3,145억원(+57, 1.8%)
-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추가 설치(296→390개소), 금년 집중 호우 복구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복구비 확대 편성
 - * 사방댐 : ('20) 553 → ('21) 740억원(+187, 33.8%)
 - * 재해복구비(농림·해수부, 산림청) : ('20) 1,162 → ('21안) 2,365억원(+1203, 103.5%)

□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및 부채·고령 농어가 소득지원 강화
 - * (어가 소득)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 年 150만원 보장 등(515억원)
 - * (고령 농가) 농지연금 가입증가 추세 등 고려 연금지급규모확대(1,479→1,809억원)
 - * (부채 농가) 농가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 사업 확대(2,800→2979억원)
 - * (경영 자금) 금융지원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00억원 출연
- 농어촌의 자생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신규 5개소, 31억원)·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0.4→0.5조원)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농업·농촌	160,705	163,364	▪ 맞춤형농지지원 7,718(+1,258), 일반농산어촌개발 6,134(+895)
▪ 수산·어촌	24,218	26,558	▪ 어촌뉴딜 5,219(+875),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430(+409)
▪ 임업·산촌	22,836	24,921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2,311(+396)
▪ 식품업	7,394	8,911	▪ 푸드서비스선진화(외식쿠폰) 698(+672)
합 계	215,153	223,754	4.0% 증가

- ◇ 녹색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환경위기 선제 대응
- ◇ 깨끗한 물 공급, 홍수·수질관리 등 물관리全过程 스마트화
- ◇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제품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 저감
- ◇ 국립공원 체류 인프라, 탐방 안전 투자 확대 등 국민 여가수요 충족

① 글로벌 기후·환경위기에 대응, 그린뉴딜 프로젝트 투자 확대

- ①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
→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구 분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	승용차 7.5만대, 화물차 2.5만대 버스 1,000대, 이륜차 2만대	승용차 1.5만대, 버스 180대, 화물차(대형) 5대(시범사업)
충전인프라	급속충전기 1,570기 완속충전기 8,000기 초고속 충전기 10기(시범)	일반 26기 버스 21기 집중형 9기

- ② (녹색산업) 녹색유망기업 성장 지원 및 녹색 금융·인재 등 혁신기반 강화

- '22년까지 녹색유망기업 50개사 선정, 「R&D→사업화→판로 확보(수출)」 등 성장 전주기 지원(3년간 年 최대 10억원)
- '25년까지 녹색금융 1.9조원, 녹색인재 2만명 양성

- ③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폭염·한파 적응 투자 확대

- 스마트 생태공장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저감 투자 확대(41→502억원)
- 도시 기후적응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25개소, 526억원) 조성

② 깨끗한 물 공급, 홍수·수질관리 등 물관리 전과정 스마트화

- ① (물공급) 전국 광역(~'23년)·지방상수도(~'22년, 161개 지자체)에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지방정수장 위생관리 지원(신규 262억원)
-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신규 4개소, 17억원),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338→478억원) 등을 통해 물복지 구현

② (홍수예방) 디지털트윈·드론 기반 댐 안전관리(신규 150억원),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신규 108억원) 등 홍수 대응 강화

-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 29개 댐에 대한 안전성 강화

③ (수질·수생태계) 수질측정망 고도화(60억원), 하천 횡단구조물 개선(115억원), 유역진단(128억원) 등을 통해 오염지류 수질개선

③ 미세먼지·폐기물·화학제품 등 국민 환경안전 투자 확대

① (미세먼지) 시멘트·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2,200→5,100억원),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4,279→4,688억원) 등 핵심배출원 저감투자 확대

- 드론·이동측정차량, 원격감시장비 등 감시 고도화(90→174억원)

② (폐기물) 석탄재 재활용 촉진 지원(100억원), 에너지융복합 폐기물 처리 시범사업(23억원) 등을 통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③ (화학안전)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등록물질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 471억('20년) → 537억('21년)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제품 내 미평가 함유성분('21년 250종) 위해성평가 및 살생물제 국제자료 평가검증('21년 신규 20억원)

④ 국립공원 체류인프라, 생태복원 및 탐방객 안전 투자 확대

① (체류인프라) 다도해·한려해상 등 6개 국립공원 내 저지대에 체험인프라 확충(신규 300억원)

② (안전·생태복원) 위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탐방객 안전투자* 및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138 → 550억원) 등 생태복원 확대

* 이동통신음영지역 해소(신규 7억원, 13개소), 탐방객 안전쉼터 조성(신규 10억원, 50개소)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물환경	40,913	43,210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20년 3,816→21년 4,526) ▪ 공공폐수처리시설(20년 542→21년 812)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8,172	11,689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20년 254→21년 897) ▪ 재활용품 비축(20년 94→21년 260)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27,096	34,288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20년 2,917→21년 5,656)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20년 252→21년 469)
▪ 자연환경	6,579	8,094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20년 1,409→21년 2,293) ▪ 습지보전관리(20년 165→21년 224)
▪ 환경일반	4,647	4,954	▪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20년 32→21년 102)
▪ 해양환경	2,722	2,804	▪ 해양폐기물정화(20년 254→21년 444) ▪ 갯벌생태계복원(20년 53→21년 111)
합 계	90,129	105,039	16.5% 증가

- ◇ 핵·WMD 대응 전력 강화 및 국방 R&D 투자 확대
- ◇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안보태세 유지

- 국방개혁2.0 관련 핵심전력 증강 및 국방R&D 투자 확대
 - 핵·WMD 대응 등 핵심무기체계 전력 보강에 집중 투자(14.6조원)
 - * F-35A(12,083억원), KF-X(9,069억원), 장보고Ⅲ(잠수함) 건조(5,259억원)
 - 핵심기술 개발 및 무기체계 국산화 등 국방R&D 투자 확대
 - * 국방 R&D 투자: ('20) 3.9 → ('21안) 4.3조원(+8.5%)
 - 민·군 간 기술협력 강화(spin on/spin-off)를 통한 시너지 강화(678→908억원)
-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인력구조 정예화
 - 현역을 전투임무로 재배치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군무원 증원
 - *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 증원

□ 스마트강군 기반 구축 및 장병 사기진작

- 개인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AI기술 활용 CCTV 확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
- 병사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 12.5% 인상(병장 기준, 54.1→60.9만원)
- 급식단가를 3.5% 인상(1일 8,493→8,790원)하고, 취사식당 민간 조리원 확대 (+293명)
- 이발비 신규 지급(월 1만원), 병 자기개발비 지원인원 확대 (8→23.5만명, 10만원/인), 병사 군단체보험 지원 (보험료의 80% 지원)

(억원)

구 분	'20	'21안	비 고
▪ 방위력 개선	166,804	170,738	· 핵·WMD 대응 등 무기체계(145,695억원) · 국방 R&D 투자(39,191 → 42,524억원, +8.5%) · 민군기술협력(678 → 908억원, +34%)
▪ 전력운영	334,723	358,436	·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540,900→608,500원, +12.5%) · 급식단가인상 (8,493 → 8,790원, +3.5%) · 경계력 보강 CCTV (40 → 1,968억원)
합 계	501,527	529,174	5.5% 증가

◇ 디지털 외교인프라 전략적 ODA를 통한 능동적·선제적 외교역량 강화

◇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 · 경제 · 생명공동체 기반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외교 인프라 조성 및 新한류확산을 위해 해외 거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우리의 방역경험·정책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쌍방향·비대면 교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신규, 67억원)
- 재외공관 시설개선에 우리의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지원(신규, 73억원)

□ 보건관련·융합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ODA 투자 확충

- 기업 등 민간기관의 해외진출 마중물 역할 강화, 글로벌 방역 선도국 위상 확립을 위한 보건 ODA 확대(0.25조→0.33조원)
- 개도국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남·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 융합 ODA 확대(0.27→0.33조원)

* 신남북방 융합ODA : ('20) 1,769억원 → ('21안) 2,279억원(+28.8%)

□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와 공동 번영 추진

-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철도연결, DMZ 국제 평화지대화 등 핵심사업 단계적 지원 확대(신규, 508억원)

* 경원선 복원(백마고지-남방한계선, 475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33억원)

- 남북간 평화 ·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보건·의료, 농축산·산림 등 인도적 교류 · 협력 사업 확대 (민생협력지원 4,511 → 5,131억원)

(억원)

구 분	'20	'21안	비 고
· 외교 · 통상 부문	40,505	42,535	· 대개도국차관(ODA)(11,849→13,132)
· 통일 부문	14,587	14,933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12,056→12,433)
합 계	55,092	57,469	4.3% 증가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

◇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 아동학대·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 강화

○ (범죄 피해자 지원) 학대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 ('20) 71개소, 226억원 → ('21) 81개소, 284억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0) 74개소, 314억원 → ('21) 76개소, 326억원

○ (법률구조)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채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확대

* 소상공인 소송구조 : ('20) 14.0천명, 19억원 → ('21) 14.5천명, 20억원

* 임금채불자 소송구조 : ('20) 105천명, 144억원 → ('21) 106천명, 149억원

○ (수용자 인권 보호) 수용자의 인권보호 위한 수용환경 개선 및 출소자 취업지원 확대

* 수용자 식사문화개선 (공동 식기 → 개별 식판), 수용자 호송시 대외 이미지 개선 (포승줄 → 호송조끼로 개선)

* 출소자 취업지원(허그일자리) : ('20) 6.5천명, 82억원 → ('21) 7.0천명, 85억원

□ 정신질환 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감독 확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교육 강화) 성범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통해 재범 억제

* 성범죄자 수강명령 확대 : ('20) 3.0천명, 4억원 → ('21) 7.5천명, 9억원

* 정신질환소년원생 특수교사제 운영 (신규, 교사 10명)

○ (전자감독 확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1:1전담 전자감독, 보석·가석방자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 보석자 전자감독 : ('20) - → ('21) 2천명, 19억원

* 가석방 전자감독 : ('20) 4대범죄(3천명) 61억원 → ('21) 전체 가석방자(5천명) 110억원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장비 등 보강 지원

- (수사역량 강화)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 : ('21안) 10억원 (신규)
- * 수사트레이닝센터 및 가상현실 감식교육 : ('21안) 4억원 (신규)
- * 경찰 조사 전용공간 확충(사무공간과 분리) : ('20) 168억원 → ('21안) 263억원

- (신종범죄 대응) 가상화폐,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신종 범죄 급증에 대응한 장비보강 등 지원 강화

- * 가상통화 추적프로그램 : ('21안) 8억원 (신규)
- * 사이버 도박 추적·분석 장비 : ('21안) 10억원 (신규)

□ 재해 예방투자·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 (안전투자 확대)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 * 재해위험지역정비 : ('20) 4,365 → ('21안) 5,119억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 ('20) 0.4 → ('21안) 0.8만개
- * 산업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 ('21안) 3,634억원(신규)

- 화재, 지진, 수난 등 재난 종류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대형·복합재난 대비 소방장비 등 확충

- * 소형 사다리차 : ('21안) 57억원(19대)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법원및헌재	21,660	21,961	· 국선변호료지원 (616)
▪ 법무및검찰	40,737	43,235	· 국가배상금 (2,500)
▪ 경찰	120,206	123,394	· 치안활동지원 (4,717)
▪ 해경	15,238	15,794	· 함정건조(1,248)
▪ 재난관리	10,529	13,258	· 재해위험지역정비(5,119)
합 계	208,371	217,642	4.4% 증가

〈참고〉 안전 분야

- ◇ 자연재해 예방투자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및 대형·복합재난 대비 기반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투자 확대

- 풍수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20→35개소), 수리 시설 개보수(0.5→0.6조원) 및 사방댐 추가 설치(296→390개소)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807→2,025개소, 누적), 디지털 트윈·드론 활용 실시간 댐관리 안전감시체계(37개소, 총사업비 1,061억원) 등 디지털 기반 첨단 국가하천·댐 관리시스템 구축
- '23년까지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100개 지류에 AI기반 빅데이터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 '21년 10개 지류 108억원(총사업비 498억원)

□ IoT 등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관리 시스템 구축

-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및 마을에 인접한 재해위험 지구 510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재해위험개선지구 240개소, 위험저수지 150개소, 급경사지 120개소

- 둔치주차장(40면이상 주차) 차량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21~'22, 380개소)

- 공급망·입출고·재고 및 운송 등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마스크, 보호복, 구호세트, 방역용 소독기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21년까지 광역거점센터(17개소), 비축창고(229개소) 구축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지속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22년까지 완비('20년 0.4→'21년 0.8→'22년 0.8만개)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미인증 위험기계 전면교체,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용자 지원
 - * (3대 위험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전면교체(3,634개소, 신규 0.2조원)
 - (뿌리산업 위험공정) 주조업, 소성가공업, 표면처리업 공정 개선(1,284개소, 신규 0.1조원)
-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확충(207→314명)

□ 대형·복합재난에 대비, 강력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소방 국가직화('20.4월) 계기로 재난 대응 전국단위 동원집결지 운영, 소방헬기 통합 운영으로 전국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 화재, 지진 등 재난 종류별 체계적인 현장인력 교육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 소형 사다리차 : ('21안) 57억원(19대) / 산불전문진화차 : ('21안) 38억원(10대)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국가하천·댐관리	5,894	8,735	· 하천유지보수·하천정비 7,642 · 스마트댐 안전관리 150
▪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5,060	5,814	· 침수, 붕괴 등 위험지역정비(5,119) · 우수저류시설 설치(695)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9,457	27,420	· 교통안전(19,233), 산재예방(6,862), 자살예방 등(1,325)
▪ 안전투자 혁신사업	-	3,634	· 미인증 위험기계기구 등 4,911대 뿌리산업 공정개선 1,284개소
▪ 소방안전교부세	7,143	9,601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교부세율 45%)
합 계	174,504	197,953	13.4% 증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지역 정착 지원 등 지역소멸 적극 대응

◇ 재정금융·정부자원관리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 확충

○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 3조 대상, 721억원 → ('21) 15조 대상, 1.05조원 (+1,359%)

○ 청년층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역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0.7만명), 청년 자립마을 조성 확대(3개 → 15개소)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 디지털일자리): +784억원, +0.7만명 (순증)

**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청년자립마을): ('20)9억원 → ('21) 77억원 (+755.6%)

○ 서해 5도·접경권 등 특수·소외지역 지원 통한 포용적 지역발전 추진

* 접경권발전지원: ('20) 399억원 → ('21) 630억원 (+57.8%)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뉴딜 관련 민자 활성화를 위한 소요 확대 반영

* 지방채인수: ('20) 7,000억원 → ('21) 26,000억원 (+271.4%)

* 산기반기금출연: ('20) 80억원 → ('21) 140억원 (+75.0%)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스마트 정부 구현

*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20)363억원 → ('21) 1,997억원 (+450.2%)

* 행정기관정보통신이용환경고도화: ('20)13억원 → ('21) 241억원 (+1696%)

(억원)

구 분	'20	'21안	비고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제외시)	537,039 (14,970)	562,217 (44,571)	· 지방교부세(52.2→51.8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721→10,522억원) · 지방채인수(0.7→2.6조원)
▪ 재정·금융	195,829	243,446	· 국고채이자상환(18.9→21.1조원)
▪ 정부자원관리	8,702	12,879	·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363→1,997억원) ·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489→1,404억원)
합 계	790,129	865,227	9.5% 증가 (교부세 제외시 29.7% 증가)